

2010 고유과제 정책제안보고서

이 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도에 발간한 고유연구과제의 연구내용,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제안에 초점을 둔 정책제안보고서입니다. 모든 고유연구과제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연구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체계적인 데이터 생산 및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최대한 조사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고객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발굴 단계부터 정책고객 참여를 확대하여 충분한 준비와 토론을 거쳤으며, 연구계획서발표회와 중간보고서 발표회, 최종 보고서 정책협의회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고객이나 정부기관의 요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정책제안보고서는 이러한 올해의 연구성과와 정책제안을 홍보하고, 또 공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회로서 발간하게 되었으며, 본 정책제안보고서에 수록된 연구들은 글로벌 역량, 진로·인권·장애, 의식·활동·문화, 건강·안전, 취약·위기 환경, 정책·지역사회 등의 주제로 분류되어 아동·청소년정책이 각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본원에서 수행한 고유연구과제의 연구성과와 정책제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본 정책제안보고서를 보신 후,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이 더 좋은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학계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 우측 상단 참여마당에 ‘연구과제수시제안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가 있으시면 적극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 볼 수 있으며,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734-6818)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직접 해당 연구진에게 해 주시고, 보고서 구입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정보학술센터(02-2188-8844, sooji@nyp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 임직원은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와 활발한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해 청소년계 여러분의 연구와 활동에 도움이 되고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한결같이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합니다.

2011.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재연

목 차

글로벌 역량

-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방안 연구: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 | 3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 | 9
-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연구 II • 문경숙 | 11

진로, 인권, 장애

-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V: 발달권·참여권 • 모상헌 | 19
-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안선영 | 24
-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 박영균 | 31

인식, 활동, 문화

-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 • 임지연 | 47
- 세대간 의식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III: 가족과 가정생활에 관한 의식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 이종원 | 56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 | 61

건강, 안전

- 위기 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 | 69
-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 최인재 | 75

취약·위기 환경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 | 87
-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 연구 I • 이해연 | 103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지원 방안 연구 I: 청소년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 | 106

정책, 지역사회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 | 113
-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 | 115
-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 | 120
-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III • 김기현 | 127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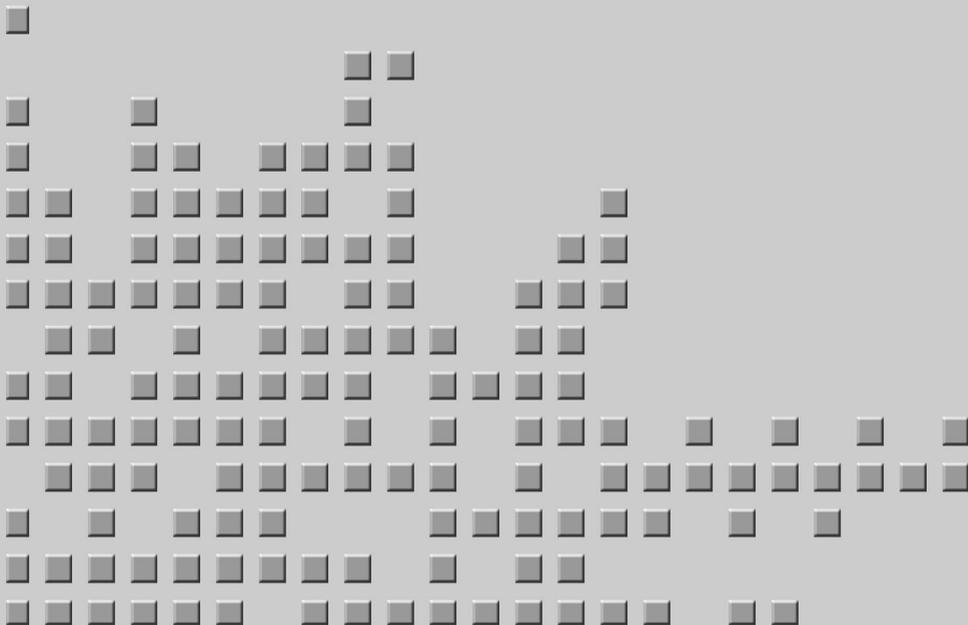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근 5년간 발간물 목록 | 14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직 명단 및 연락처 | 163

글로벌 역량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방안 연구: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 | 3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 | 9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연구 II • 문경숙 | 11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방안 연구: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80-9(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0-R09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며 글로벌 시티즌십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 방향 및 정책방안을 제안함.
- ❖ 주요내용
 - 글로벌 시티즌십은 인류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과 실천능력을 의미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교육목표임.
 - 글로벌 시티즌십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목표임.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티즌십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감과 책임감 및 자기 효능감,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실천의지나 실천경험을 도출하였고 프로그램 성과 측정을 위한 글로벌 시티즌십 측정도구를 시험적으로 개발하였음.
 -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을 위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미미함. 청소년 시설·단체에서 실시하는 해외체험, 봉사활동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해외원조 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나 강의 등이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과 관련된 프로그램임.
 - ▶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해외원조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9개 사례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참여한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티즌십 수준을 측정한 결과, 글로벌 시티즌십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티즌십 수준이 향상되었음.

- ▶ 글로벌 시티즌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참가자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문화중심주의의 영향력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수준이 높아졌음.
-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글로벌 시티즌십 향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성과를 보이는 프로그램은 활동내용에 해외체험을 포함하고 있거나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이었음.

정책제안 1

‘글로벌 시티즌 양성’을 청소년정책의 목표로 명시하고 여성가족부 ‘청소년 국제교류과’를 ‘청소년 세계시민양성과’로 개칭함.

❖ 제안배경

- ‘글로벌 시티즌 양성’은 글로벌 시민사회에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청소년계에 있어 이러한 목표의식은 희박한 상태임.
- 청소년정책 행정부서인 여성가족부 청소년조직의 명칭이 이러한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영역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면 이러한 목표의 확산과 실천에 임팩트를 제공할 것임.

❖ 연구결과

- 1990년대 세계화(지구화) 논의가 시작되던 시점으로부터 국제교류활동은 청소년정책의 주요 영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왔으며 그 목적은 국제감각, 또는 글로벌마인드의 형성, 세계시민 양성 등으로 제시되어 왔음.
- 청소년 국제교류가 본격화된 지 20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국제교류활동의 목표를 국가위상의 변화에 걸맞게 무한경쟁 사회에서의 생존이라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지구(촌)사회에 대한 적극적 공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 현재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을 위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미미함.
- 청소년시설·단체에서 실시하는 해외체험, 봉사활동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해외원조 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나 강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 국제교류과’의 명칭을 청소년교류의 목적을 명시하는 ‘세계시민 양성과’로 개칭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현장의 프로그램들의 목표를 하나로 결집시켜 청소년현장의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글로벌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추진 주체는 아무 데도 없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과 명칭의 개칭’을 위해서는 청소년정책 담당부서의 합의와 여성가족부 내 설득이 필요하나 이러한 것을 추진해 낼 수 있는 주체가 없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부처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함.

정책제안 2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그룹의 구성·운영 및 국제교류담당자 워크숍 실시

❖ **제안배경**

- 청소년 현장의 글로벌 시티즌십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약함. 이 때문에 글로벌 시티즌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내실화 되지 못하고 있음.

❖ **연구결과**

- 청소년 국제교류 등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한 전문가 인적자원이 많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단체 등이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원활히 받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티즌십을 연구하는 학자, 국제교류 프로그램,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단체 및 민간단체 현장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 컨설팅 그룹을 구성함.
- 매년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국제교류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해당 사업 실무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함.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을 위해 필요한 내용 및 활동 방법 등을 익히고 이를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촉진함.
- 사업목표의 설정 및 사업의 시행, 사업성과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 매뉴얼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함.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청소년분야의 프로그램에 비해 내용성이 더 취약한 상태임.
- 청소년전담 부서가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유관부처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제고를 선도해 나가야 함.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문가그룹은 임시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질 것임.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그룹 운영’ 및 ‘실무자 워크숍 개최’를 사업화하여 사업담당자와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함.
- 글로벌 시티즌십 측정도구 등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 개발이 필요함.

정책제안 3

여러 부처의 개도국 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한국청소년자원봉사단’으로 통일성을 주는 CI와 가이드라인 마련

❖ 제안배경

- 글로벌 시티즌십을 함양하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는 해외자원봉사활동임.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해외자원봉사활동에 통일성을 부여하여 국내외에서 한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와 파급력을 높이고자 함.

❖ 연구결과

- 현재 청소년자원봉사단은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가 실시하는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가 직접 실시하는 해외봉사단 및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서 실시하는 해외봉사단,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해외봉사단 등으로 부처별로 나뉘어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봉사단 사업에 주무 부처를 두어 ‘한국청소년봉사단’으로 통일하여 미국의 Peace Corp처럼 대외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함. 이러한 조치는 한국청소년의 해외자원봉사단을 브랜드화 하는 것으로써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함.

- 이를 위해 청소년자원봉사단 주무부처를 두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봉사단 운영 가이드라인과 CI 및 로고, 사업지침 등을 마련하여 공유함. 이후 정부예산에 의한 청소년 봉사활동은 이에 준해 활동할 수 있도록 통일시킴.

❖ **유관부처 정책현황**

-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등이 부처간 연계성 없이 별도로 청소년해외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해당 사업이 각 부의 주요 사업이 아니어서 관련부처의 관심이 적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약할 것임.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각 부처 사업실태 및 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운영을 표준화하기 위한 모형을 탐색해야 할 것임.
- 청소년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청소년해외봉사활동’을 발전시키고 파급효과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

정책제안 4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위한 On-line Gateway 구축

❖ **제안배경**

-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교육자(청소년지도사, 교사 등)들이 지구적 사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접촉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실생활과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음. 이를 위해 On-line Gateway가 필요함.

❖ **연구결과**

- 현재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많은 국제교류활동 들이 파편화되고 단절적으로 이루어져 교류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영국은 현재 200여개 학교가 아시아의 400개 학교와 온라인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Gateway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음. 사이버외교사절단 V@ank도 온라인 Gateway를 통해 세계 각국을 연결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음.

- 한국과 아시아의 청소년, 한국과 세계청소년이 On-line으로 교류할 수 있는 Gateway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학교단위, 국가 간 청소년교류 등 함께 활동한 청소년 소그룹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구축되어야 함.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소년 모국연수사업을, 국제협력단은 민간단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지원하고 있으나 참여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On-line Gateway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의 교육교류는 단발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 On-line Gateway를 구축할 여건이 되지 못함.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On-line Gateway를 구축하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의 Hub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사업담당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홍보와 협조가 필요함.
- 그렇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의 교류창구로서 제한될 것이며 파급력이 낮을 것임.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각 부처 청소년교류사업 등을 포괄할 수 있는 On-line Contents 개발이 검토되어야 함.
- 청소년들의 욕구와 각 부처 사업담당자 들의 욕구를 반영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On-line Contents로 구성되어야 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90-8(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0-R12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한국사회에 급속히 증가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 및 자연스러운 주류사회 편입은 한국사회의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다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시각은 주류집단에 비해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데 일조함.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합한 지원 및 정책의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고정관념이 낙인으로 형성되어 새로운 사회적 소외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발달 및 성장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 중 중산층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의 정확한 지점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2011년 본조사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사모형 및 내용설계를 위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생태학적 맥락이론을 기초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함.
 - 국내외 아동·청소년 관련 패널조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 시사점을 도출함.
 - 전국 다문화가정 출신 초등학교 4학년 전체 모집단 중 경기지역과 경남지역의 총 1,188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학생 500명과 학부모 500명,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로 예비 조사를 실시함.

- 표본설계 시 청소년과 학부모의 경우 PAPI와 CAPI에 따른 차이를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표본할당을 함으로써 차년도 조사의 타당성 및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함.
- 2011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예비조사 설문지를 청소년, 학부모, 학교교사용으로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함.
- 향후 본 조사용 설문지를 도출하고, 도출된 설문지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분석을 실시할 것임.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연구II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문경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92-2(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0-R13
978-89-7816-893-9(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0-R13-1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일정 기간 외국에서 수학한 후 국내로 귀국한 청소년의 적응과정을 살펴보는데 있음.
 - 귀국청소년이 경험한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 정체성을 조명해봄으로써 조기유학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음.
 - 미국 현지에서 조기유학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적응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조기유학 청소년이 현지에서 적응의 문제를 덜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 보는데 있음.
- ❖ 주요내용
 - 귀국청소년의 국내 적응은 조기유학을 갖다온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초등학교 때 조기유학을 갖다 온 귀국청소년이 적응의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부모가 희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발달 양상과 관련이 있었음.
 -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심리·정서 상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지원 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귀국청소년은 조기유학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외국체류 경험이 긍정적인 발달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제안 1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기유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제안배경

- 공식 집계된 조사에 의하면 조기유학생의 약 70%가 초등학생으로, 조기유학은 초등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초등학교 시기는 다양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외국의 문화와 교육에 노출되는 것은 향후 개인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연구결과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 중에 초등학생 때 출국한 비율은 83.2%, 초등학생 때 귀국한 비율은 65.8%로, 초등학생의 조기유학 비율이 높음. 조기유학 기간도 평균 31개월로, 초등학교 때 출국하여 초등학교 때 귀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조기유학을 준비하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자료집을 작성하여 일선학교에 배포할 경우, 이것이 오히려 조기유학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외국의 교육여건과 문화, 생활 상에 대한 자료를 일선학교에 배포할 경우, 주로 소개될 외국의 사례가 선진국일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교육여건에 대한 불만과 현실 불만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조기유학의 동기, 귀국동기, 조기유학생의 분포 등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누적자료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음.
- 주로 조기유학국으로 선택되는 나라에 대한 교육과 문화 정보를 현지 거주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하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친절한 자료집을 만들어 두어야 함.

정책제안 2

현행 영어교육의 방향을 수정해야 함.

❖ 제안배경

- 조기유학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영어습득에 있음. 정부에서는 공교육 내에서 영어 교육 수요를 감당하려 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는 공교육 밖에서 영어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한국을 벗어나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떠나는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정부의 의도와 어긋나고 있는 영어교육 열풍은 영어교육 정책의 궤도 수정을 요하고 있음.

❖ 연구결과

- 본 설문 조사결과 조기유학의 동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가족 상황의 변화 때문이라는 응답을 제외하면,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서'가 가장 높음(초 46%, 중 50.0%, 고 35.6%). 글로벌 인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국제 감각을 지닌 청소년은 곧 외국어가 능통한 청소년과 동일시 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모국어처럼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조기유학국으로 선택되는 국가가 영어권에 집중(북미지역: 초 65%, 중 48.1%, 고 49.0%)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영어교육리더학교 100곳 선정(초등 50곳, 중등 50곳): 영어교육 리더학교는 수업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거나 수준별 수업을 마련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 우수 학교로, 정부는 학교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100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음.
-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영어회화 능통자를 선발하여 학교 현장에 배치·활용함으로써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고 있음.(’08년 약 5,000명)
-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확대: 연수 인원을 확대하고(’08, 1,200명→’09, 1,500명), 수요자 맞춤형 연수를 통해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킴.
- EBSe를 활용한 무료 영어학습 서비스 강화: 연령별로 수요자 특성에 맞춘 무료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영어수업에서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교사연수를 확대함.
-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2011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초등 : 영어체험교실, 중등 :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할 예정임.

- 영어교육 중점학교 운영: 영어과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영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무학년제 방과후 영어교실을 운영.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조기유학을 영어습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는 과도한 경쟁의식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의식을 공유하는 학부모와 청소년의 지구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부분임.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영어에 대한 정부정책 담당자의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청소년이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영어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함. 영어격차가 능력의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영어를 이용한 과도한 경쟁체제를 누그러뜨려야 함.

정책제안 3

조기유학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함.

❖ 제안배경

-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조기유학은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 자의든 타의든 조기유학을 선택한 청소년이 조기유학으로 인해 개인의 발전을 이루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경험이 되도록 지원해야 함.

❖ 연구결과

- 조기유학으로 인해 발달상의 장애를 경험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음. 조기유학으로 외국어 실력이 좋아진 것에 더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겼고, 사물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으며,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조기유학 경험이 개인과 사회의 발달에 기여하는 경험이 되도록 지원하는 노력은 조기유학을 조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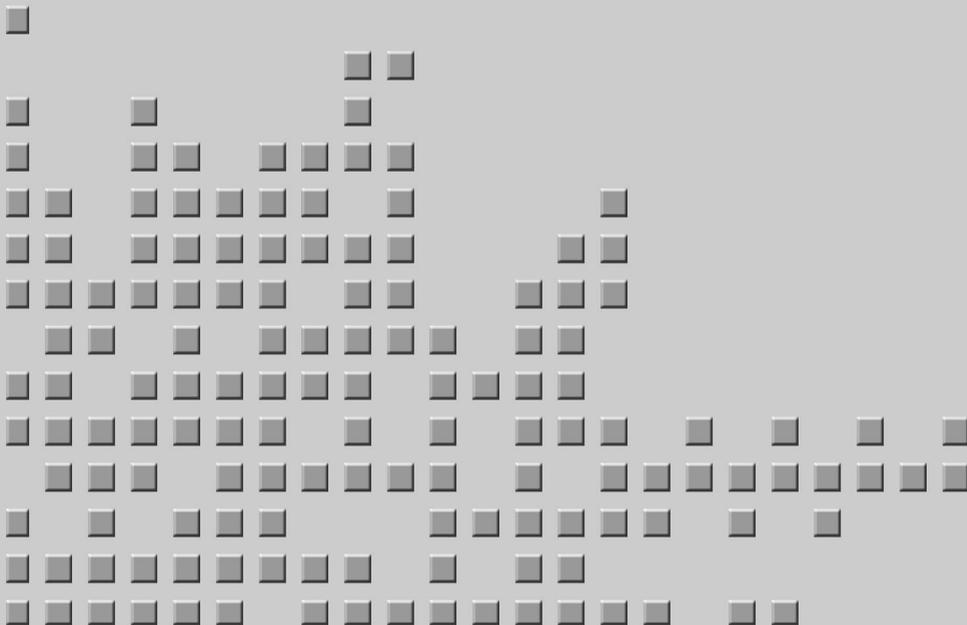
- 조기유학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긍정적인 발달을 조기유학이라는 사건 없이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업성취 일변도의 교육정책보다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두는 교육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진로, 인권, 장애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Ⅶ: 발달권·참여권 •모상현 | 19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안선영 | 2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박영균 | 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V : 발달권·참여권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87-8, 자체 보고서 번호 : 10-R11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5차년도 과제로서 아동권리협약에서 분류한 인권영역 중 발달권과 참여권 분야의 지표를 검토·보완하여 표준화¹⁾된 설문도구를 개발하고자 실시함.
 - 상기 설문도구를 활용한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발달권·참여권 영역에서 우리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수준을 가늠하고자 함.
 - 발달권·참여권영역에서의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하며, 인권신장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변화양상과 진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반복 횡단자료의 축적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 국제기준대비 OECD 위상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산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부분적으로 개발된 설문도구를 검토하여 올해에는 전체 4개의 인권영역 중 발달권과 참여권분야에서 지표의 보완과

1)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표준화란 척도의 타당도와 문항 간 신뢰도 분석을 통한 표준화작업이 아닌 - 인권문항이 하나의 지표를 대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은 불필요함 - 인권 변화양상의 시계열적 횡단자료의 축적을 목적으로 실시될 기본조사도구를 개발한다는 의미임.

- 추가산출 작업을 수행함.
-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에서 표준화된 설문도구의 개발을 위해 기(既) 개발된 지표항목들 중 관심영역별 대표항목을 선별·추가하여 관계전문가·실무자 등과의 협의를 진행함.
 -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에서 새로운 지표항목을 추가·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두 영역의 모든 지표를 포괄하는 133문항(청소년용 기준)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발달권 63문항, 참여권 61문항, 배경변인 9문항)를 개발하였음.
 - 새로 개발된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중·고 9,59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 보고서는 총 세 종으로 발간되었으며 제1권은 정성지표 중심의 연구보고서로 지표개발과정과 정책제언 중심으로, 제2권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분석중심의 자료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권은 행정통계 자료를 토대로 세부별 현황과 정책적 제안을 기술하고 있음.
 - 조사결과보고서(제1권, 제2권)에 행정통계에 근거한 정량지표를 추가하여(제3권) 해당 정성지표 중심의 설문조사결과를 보완했으며, 정성·정량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아동·청소년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환경개선과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함.
 -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참여권분야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있는 중요 지표를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연령층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층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음.

【발달권영역 주요 실태결과】

- 대다수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
- 아동과는 달리 성적하위 집단이나 경제수준 하위집단 청소년들의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남.
- 학업 포기의 이유로 학교부적응의 문제가 높게 나타남.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하위집단이 중간 및 상위집단 보다, 조손 및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집단보다 학업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부모자녀관계, 아버지와의 대화빈도, 가정, 학교 및 친구에 대한 만족정도, 전반적인 행복감정도에서 아동과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 수준 상위집단이 중간 및 하위집단 보다 높게 나타남.
- 어떻게 휴일을 보내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남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게임이 가장 높았으며, 여가시간의 충분성에 대해 대다수의 청소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아동 및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 및 정서적 고립감 정도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수준 변

- 인에 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하위집단에서 높았음.
-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조절감, 낙관성 수준은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상위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이 동아리 가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단체에 대한 가입율도 아주 낮았음.
 - 갈등해결방식 중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뒤로 회피, 양보 전략을 주로 사용함. 지배전략을 사용한다는 빈도는 매우 낮았음. 협력전략과 양보전략의 경우 양 부모가정,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 수준 상위집단 아동·청소년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관찰됨.
 - 청소년의 60%가 진로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지만 만족정도 수준은 낮았음. 진로준비행동 정도와 진로직업 태도는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상위집단에서 높았음.
 - 졸업 후 진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 중학생의 45.5%는 인문계 진학, 추후결정이 28.8%, 자율형 사립고 진학이 15.1%, 전문계 진학이 9.3%로 나타났음.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66.5%가 4년제 대학진학을 생각하고 있음. 2년제 대학진학과 졸업 후 취직은 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하위집단 및 중간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충분했지만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은 부족하게 나타남.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양부모가정 및 가정경제수준 상위집단에서 양호하게 평가함. 정기적인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청소년의 경우 매우 낮게 나타남.

【참여권영역 주요 실태결과】

- 학교와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은 낮았으며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남.
-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 신체의 자유, 사적취향의 표현 등에 있어 아동·청소년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우선되어 인권은 유보되는 측면이 있었고, 미성숙하고 무능력하며 잠재적 문제집단이라는 사회의 편견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학교와 사회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 참여도 미흡하였는데, 학내 매체, 학생회, 동아리 등 의견표현 통로나 자치모임 운영의 민주성과 활성화, 학생 자율성 보장수준이 낮은 편이었고 학교 규칙 제·개정 시 주요 구성원인 학생의 의견 반영 수준도 낮았으며,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 결정 시 학생의 선택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음.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아동·청소년정책과 시설 설치·운영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도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의 하나인 자원봉사활동 참

- 여이유로 ‘학교성적 반영’을 1순위로 꼽고 있음(중·고등학생).
- 참여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정보접근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눈높이의 정책 홍보 자료와 인권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보장에 필수적인 인권교육 실시 정도도 매우 미흡함.
 - 사회참여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은 높은 편이며 참여의 장애요인 이자 활성화 방안으로 ‘시간부족’과 ‘정보부족’, ‘사회의 편견’ 등의 사안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아동·청소년인권센터와 같은 인권 옹호기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정책 제언

❖ 아동의 발달·참여권 관련 정책 제언

- 아동의 성장에 대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아동정책 수립이 요청됨.
- 아동정책이 수립되면 각 정책의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성과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아동지표 및 정책 성과지표의 확립이 요구됨.
-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필요한 법적 틀과 방법을 도입할 의무와 표출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명시할 수 있는 ‘아동참여’에 대한 논의 공론화 및 체계화가 요구됨.
-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아동정책조정기구 활동 및 운영 재개가 요청됨.
- 아동의 권리에 대한 폭 넓은 권한을 가진 아동 옴부즈맨이나 커미셔너 같은 독립적인 인권기관으로서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동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집행할 아동 담당 부서의 확대 및 핵심연구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함.
- 아동의 자기 의견표명을 지지하고 권장하는 환경조성과 여러 장치에 의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정책담당자, 지도자,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 청소년 발달권·참여권 관련 정책제언

- 청소년 발달 정책을 효과적으로 입안하여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 발달권 규정과 과학

적인 지표체계 구축

- 취약계층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 개선을 정책방안 마련
- 청소년들이 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 시설과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정서적 발달 정책 개선방안 마련
- 동아리 육성과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
- 청소년의 직업적 발달을 위해서는 체계적이 진로교육의 실시와 지역사회의 직업자원을 종합한 직업자원지도의 작성 및 직업현장과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
- 충분한 수면시간의 확보와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지도록 학교체육과 사회체육 활동 강화
-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참여권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담당자, 청소년지도자,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 참여에 관한 정책과 제도, 경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실제 참여 행동의 전제로서 이를 위한 참여 정보의 제공과 참여를 통한 교육 활성화가 요구됨.
- 아동·청소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지역 수준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참여 친화적인 지방자치단체(도시) 모델 형성에 대한 요구
- 아동·청소년 참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집단과 세대간, 부문간 참여협력 체계가 요청됨.
-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의 증진과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밑으로부터 정책 참여 활성화와 비제도권 참여 수렴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에너지를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제공함.
-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참여 관련 국제교류 활성화를 강화함.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911-0(93330)(세트), 자체 보고서 번호 : 10-R18, R18-1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인기 이행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방식 전반에 변화가 목격되고 있음. 성인기 이행방식은 이후 개인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살아갈 환경으로서의 사회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인기 이행 실태와 관련 요인들을 고찰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주요내용
 - 고학력화와 이로 인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불일치 현상은 취업, 결혼, 분가, 출산 등의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를 지연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 및 팽팽한 일자리의 부족,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기업의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 경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 성인기 이행 시기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상황과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입장에 놓이는 여성들이 많고, 이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높은 주거비는 청년 세대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대학과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은 높은 주거 비용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짐.

- 일본, 영국, 캐나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을 살펴본 결과 도출된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성인기 이행 방식이 다양화되고 경로의 비선형화가 목격되었음. 둘째, 성인기로의 진입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셋째, 경제적 요인과 개인화 경향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출생율 감소와 노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넷째, 청년세대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의존기간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청년정책의 대상이 30대 후반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호주의 사례연구를 통해 발견한 성인기 이행양상에 대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성인기 이행 양상에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 둘째, 성인기 이행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형적 이행 양상을 가정한 정책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셋째, 사회경제적 배경 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성인기 이행 양상이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인기 이행 지원정책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정책제안 1

좋은 일자리의 창출

❖ 제안배경

- 청년층의 고용상황 악화는 성인기 이행 지연의 가장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청년층 고용문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력중시형 노동력 수요로 변화하는 구조적인 원인,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수요와 괴리된 인력이 양성되고 있는 공급 측면의 요인,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job mismatch)를 해소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취약이라는 제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그 중에서도 과거에 청년층에게 제공되던 중간일자리 기회가 사라지면서 안정된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밖에서 대기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와 미취업을 전전하는 청년층이 증가한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보다 첫 일자리의 질이나 불안정한 취업경험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력 수요 요인으로 성장과 투자의 고용창출력 저하가 지적되지만,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는 직업경력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비효율적인 직장 이동을 야기함.
- 1993~2006년 동안 중간일자리의 감소는 대부분 청년층에서 집중되었음. 청년층에서 상위 일자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상위임금계층의 절대적 규모는 줄어들고 있음. 이는 청년층의 경우 상위 일자리에 진입해도 좋은 조건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함.
- 중간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간계층이 될 만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계층의 절대 수가 감소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mismatch)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될 수밖에 없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노동부)
- 만 29세 이하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인턴제(행정안전부)
- 만 29세 이하 신규졸업자를 대상으로 한(학력제한이 없음) 공공기관 인턴제(기획재정부)
- 예비교원들이 학교현장 수업지도,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보조 인턴교사제(교육과학기술부)
- 만 18세 이상 33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분야 청년인턴제(문화관광부)
-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를 위한 청년창업지원(금융위원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정부의 청년고용에 대한 대규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층 고용문제가 경기적인 요인을 넘어서 구조적·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현상임을 시사함. 따라서 현재의 사후적인 단기 실업대책을 넘어서는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나가야 함.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악화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공시하는

-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인 공헌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이러한 실적을 조달 계약 시 우대 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고용조정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관행을 시정해야 함.

정책제안 2

돌봄 노동의 사회화 및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 제안배경

- 일과 가정을 양행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여성이 출산과 이에 따른 양육의 부담을 거의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현실조건하에서라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의 관계는 역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함.
-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제도는 여성고용지원 보다는 출산장려와 아동발달, 아동간 형평성의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음. 소득수준을 고려한 차등보육료 지원이 추가되면서 맞벌이부부는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여성과 남성이 각기 다른 직종에서 일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성별직종분리는 궁극적으로 보상의 차이로 귀결되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경제적 독립성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이와 마찬가지로 남성은 전일제로 일하고 여성은 시간제(단시간근로)로 일하는 것이 규범이 된다면 이 역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저해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온존시키는 기제로 작동하여, 여성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의 주변부를 떠돌게 될 것임.
- 일·가정 양립이라는 명목 하에 유연근로제나 단시간근로를 확대하려는 정책들은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를 확대시킬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유연근로제나 시간제 근로 확대보다는 모든 노동자의 실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연구결과

- 취업상태는 남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높이는 반면 여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에게는 결혼과 노동시장 참여가 일정 정도 대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초혼과 출산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낳는데, 이러한 현상은 보다

젊은 코호트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음.

- 여성에게 있어서 현재 취업해 있다는 사실은 초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온 이력은 오히려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시사하는 바가 큼. 이 결과는 여성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 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여성 노동의 안정화와 관련된 정책은 전무함.
- 국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 보육예산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05년 1조 3229억원, 2007년 2조 2866억원, 2009년 3조 5738억원에 달함. 2009년의 영 유아 보육지원 사업 총 예산은 5조 4000억 규모로 GDP 대비 0.53%임. 여성 고용지 원과 관련이 있는 보육지원 정책으로는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가족친화기업인증(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보육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90%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보육료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보육료 지원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족 수준에서 보육 비용 감소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육에 대한 투자가 여성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며, 취업을 모든 여성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 보육지원제도를 여성고용에 친화적으로 설계해야 함.
- 보육서비스 기관의 공공화
-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정책제안 3

청년층 주거지원

❖ 제안배경

- 청년 세대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졌음.
- 주거비 상승은 결혼비용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청년층은 결혼시기를 늦추기 시작하였으며,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 출산률 역시 낮아지고 있음.
- 대학과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은 높은 주거 비용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불평 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짐.

❖ 연구결과

-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결혼 전 부모와 동거를 하는 남유럽이나 유교문화권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더 이상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양상을 보임.
- 15~34세 중 결혼하면 분가하는 추세는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
- 분가율은 1990년대 전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결혼 분가가 줄어들어 발생한 현상임. 15~34세를 보면 1995년까지는 분가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1985~1995년간 4.2%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1995~2005년 간에는 5.4%포인트 감소해 1995년까지 증가하는 속도보다 감소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 임신중 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청년층의 주거권 보장 필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음.
-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높은 주택가격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정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대학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 청년정책에서 주거권을 청년의 사회적 시민권으로 다루어야 함.



장애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박영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ISBN 978-89-7816-900-4(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0-R16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임. 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이들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 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장애아동·청소년 정책은 무엇인가? 올해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임.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애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함.
 - ❖ 주요내용
 - 이 연구는 2개년에 걸쳐 진행된 협동연구였으며, 각 연도별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음.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구에서 본원 연구진은 총괄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각 세부연구과제의 진행과정을 조율하여 우수한 연구결과를 생산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다음에 연도별 연구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을 제시하였음.
1. 장애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 ▶ 인간의 질 높은 삶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외부적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동시에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주관적 만족도는 완전히 개인적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표준화하거나 혹은 지표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장애아동의 삶의 질은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이어지며, 그 요구와 필요가 성장과정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하게 됨. 이를 위해 가족과 사회에 의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이 요구됨.

- ▶ 이 연구과제의 총괄보고서에서 재활치료 바우처에 관한 문제와 그 개선방안을 모색 하였음.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일상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이나 지원을 돕는 정책을 포함함. 그리고 세부 위탁과제에서는 장애아동의 성 문제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에 대한 예방이나 사후 조치 등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함. 또 다른 하나의 세부과제에서는 최근 사회환경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되었음.
- ▶ 이 연구과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이므로 총괄연구는 본원 연구진이 수행하고,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과 장애 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과제는 협동연구기관에서 수행함. 그리고 각 주제별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이 연구의 총괄보고서에 반영하여 연구보고서의 종합적 이해도 증진과 더불어 정책제언의 질적 수준을 높임. 본원 연구진의 주요 역할은 총괄연구과제 수행과 각 세부과제 진행을 조율하고 연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초점이 있음.

2.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

- ▶ 별도의 위탁과제 연구를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실태를 알아봄.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성 문제는 불가항력 상태의 아동 성폭력만큼이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문제 실태파악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탐구함.
- ▶ 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성문제 실태를 조사하고 또 면접조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심각한 성문제를 이슈화하여 이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움은 물론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본질적 지원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 세부 위탁연구과제는 최근 이와 같은 아동 성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도출해 내고 이러한 사회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요 내용임.

3. 장애 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 ▶ 생애 주기에서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완성해 가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임.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여러 가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이들이 원만한 발달과정을 거쳐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
- ▶ 건강가정지원법에 규정된 ‘가족’의 개념은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라 정의됨.
- ▶ 이 연구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가족과 가정에 대한 개념을 건강가정지원법상의 가족과 가정의 개념을 포괄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즉, ‘장애 아동·청소년의 가족이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과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
- ▶ 가족지원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면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 및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 가족의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를 돕는 일을 의미함. 가족을 어떤 프로그램의 수혜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을 고려하여 가족 스스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문제해결에 중추적인 위치에 놓이도록 국가의 정책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 이 연구는 건강한 아동·청소년을 기르는데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 초점이 모아져 있음.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하루빨리 장애 아동·청소년 가족지원 서비스 제도가 개선·시행되어야 함.

교사 및 부모 중심의 장애 아동·청소년 성교육 개선

❖ 제안배경

-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자체가 부모나 교사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장애 아동·청소년의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면 부모와 교사가 즉각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교육 전문가가 성교육을 하는 경우보다 부모나 교사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성교육이 더 효과적임. 따라서 부모와 교사가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같이 만나서 처음부터 함께 성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연구결과

-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성교육이 주가 되어야 하나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전문기관은 경기도 1곳을 제외하고 제나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 제나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아 대상 성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마련하여 6개월 교육과정(1주일에 1회 교육) 이수 후 6개월 동안 발달장애 자원봉사(매일 일지 작성 및 결과물 해당교사에게 발송)를 조건으로 하여 총 1년여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선발하고 있음. 이는 2006년도부터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모 자녀양육경험자 그리고 발달장애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24명을 배출하였으나, 실제로 긴 교육과정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이 많아 실제 전문강사 양성 수가 많지 않음. 2009년도에는 비장애 전문강사는 2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발달장애 부모가 강사로 배출되었음

〈표 1〉 발달장애인 성교육강사 양성과정 내용 및 성과

년도	교육과정	성과	실인원	연인원
2006	이론교육 모의강의훈련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의 성교육 양성과정 구축 - 발달장애인 성교육을 기본 8회기로 구축 - 발달장애인의 성교육 방법 및 회기에 관한 인식 개선 - 부모교육▶발달장애인성교육▶강사와 부모 종결평가 순의 교육과정으로 정례화함 	24	204
2008	이론교육 모의강의훈련 실습 인형을 활용한 성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성교육 인형극을 시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임 	21	557
2009	이론교육 모의강의훈련 실습 (2008년 교육생 대상으로 교육방법론 심화과정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교육생에게는 기본교육과정 실시 - 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론 제공 	24	296
계			69	1,057

❖ **유관부처 정책현황**

- 현재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이 일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성교육 전문 강사 양성기관 및 예산 확보 문제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장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 확보

정책제안 2

전문성을 갖춘 성교육 전문가 양성

❖ 제안배경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성교육 전문가는 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전문가의 대부분이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따라서 장애아동의 심리적·신체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성교육 전문가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에 근거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전달이 필요함.

❖ 연구결과

-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은 대부분 일반적인 성교육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성교육 전문가에 의한 성교육이 아니라 부모·교사 중심의 성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자체가 부모나 교사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장애 아동·청소년의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면 부모와 교사가 즉각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강사가 성교육을 하는 경우보다 더 효과적이며, 부모와 교사가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같이 만나서 처음부터 함께 성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임. 따라서 부모나 교사에 대한 교육이 선행된 다음 장애아동에 대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부모교육으로 마무리하여, 성교육전문가는 성교육을 위한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부모와 교사를 연계시키는 역할만 할 뿐 부모와 교사가 장애 아동·청소년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특히 통합학교의 특수학급에서는 일반교사의 연수과정에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을 두어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사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도 마련해야 할 것임.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성교육뿐만 아니라 비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장애 인성교육을 추가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이 비장애 아동·청소년과 함께 더불어 지낼 수 있도록 부모가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은 생애주기별로 해당부처가 나누어져 있어 지속적·반복적 성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생애주기별로 학생인 경우 교육과학기술

부에서, 성인인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인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부처의 업무가 중첩적이어서 생애주기별로 책임 있는 전달체계가 조성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해당부처가 업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 정책 중복 혹은 애매함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교육 시책 추진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 담당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결정이 요청됨.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정책의 주 담당부처 결정 및 전문가 양성기관 확대 및 정책적 지원의 확대

정책제안 3

장애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 **제안배경**

- 현재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현재 몇몇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장애 아동·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피해자 지원시설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연구결과**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중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장애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다른 피해자에 비해 지원과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농어촌 등의 지역에는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음. 이러한 시설들이 없는 지역의 장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역들에 피해자 지원시설들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 피해자 지원시설 중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세 개

밖에 안되며, 이 세 개 시설의 정원은 40명에 불과함. 이는 보호시설이 필요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함.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비율이 20%대였으며, 보호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장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임. 나아가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성이 오히려 적절하고 유효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음.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망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함. 따라서 연계망 구축을 위한 법률적 지원, 중심기관의 지정, 지역사회 자원과 관련된 database 구축 및 활용, 서비스 연계망 구축 체계 모델 등에 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유관부처 정책현황**

- 대체적으로 현행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층을 위한 특화된 지원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정책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 중 일반 비장애인이거나 성인 피해자 중심의 시설과는 좀 다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립이 필요함.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공조가 무엇보다 가장 어렵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생각됨. 즉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과의 연계 및 정책협조가 필요함.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정부 해당 부처 간 정책의 필요성 공감대 확보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정책제안 4

법조계의 장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

❖ **제안배경**

- 법조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수

사, 재판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형사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진술녹화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며, 그렇게 될 때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진술녹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려우며, 자기표현 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나아가 각 시·군·구의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소양 또는 교양 교육으로 장애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교육시간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사례)

① 소송 안내 및 상담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법적인 대처방법으로 피해자는 우선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음. 물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음.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이 두 가지 소송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자세하게 하고 있음. 형사소송의 경우 고소의 필요성과 의의를 알리고, 소송에 따른 절차와 방법, 소송 진행 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보호자가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② 법률자문 및 연계

-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센터와 연계된 경찰 및 센터의 자문변호사를 통하여 아동 성폭력사건의 법적 절차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성폭력으로 인한 형사·민사·가사 사건에 대하여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음.

③ 경찰·검찰 수사 지원

- 해바라기아동센터는 경찰의 수사과정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시 경찰에게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피해아동에 관한자료와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과 유기적으로 대응함.

④ 증거자료 지원

-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증거자료 수집을 지원하고 있음. 즉, 해바라기아동센터 관련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진단서, 소아정신과 의사 소견서, 상해 사진(의뢰 시 상흔이 있을 경우) 등을 법원에 제출함.

⑤ 진술녹화협조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녹화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녹화 자료가 법적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음. 즉, 피해아동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의 조사실과 녹화·녹음이 가능하고 경찰 및 아동심리 전문가가 진술녹화 장면을 관찰 입회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마련하였음. 이를 통해 피해아동이 여러 번 진술하게 되면서 겪게 될 고통과 수사기관의 중복조사를 예방할 수 있게 됨. 한편, 해바라기아동센터는 피해아동의 진술 녹화 시, 신뢰할 수 있는 자로서 상담원, 임상심리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 등이 동석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나 심리적 상태로 인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 진술조사 기술을 숙지한 센터 직원이 아동에 대한 면접조사를 경찰의 동석 하에 실시하고 있음.

⑥ 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거나 아동 성폭력에 대해 판사 및 검사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예를 들면 법원에 진정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도록 함. 그리고 보호자의 심리적 지지와 재판진행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행지원을 하고 있음.

⑦ 의견서·진정서 제출, 전문가 증인출두

-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면담, 신체검사 소견, 증거확보, 심리검사 결과, 정신의학적 소견 등 센터 내 지원에 대한 요약정리 자료를 통하여 경찰이나 법원의 이해를 돕고 성폭력 피해 아동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의견서를 제출함. 또한 법원이 피해아동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자 센터의 전문가를 증인 소환하는 경우에 센터의 담당 상담원 등 관련 전문가가 공판에 출두하기도 함.

⑧ 법적 증언 준비 교육

- 불가피하게 아동이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두하게 될 경우 또는 부모가 증인으로 출두하게 될 경우에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이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법정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심리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정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⑨ 2차 피해 예방

-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2차 피해의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지침 등 유관부처에서 정책입안 및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정부 및 성교육 담당 기관 간의 업무 협조 강화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효율적인 성폭력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조계를 대상으로 장애아동 성폭력의 심각성과 현황을 알려 인식을 바로 고치는 등 법률 개정을 통한 강력한 제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정책제안 5

장애관련 법령의 개정

❖ **제안배경**

- 현행 장애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자 함

❖ **연구결과**

법령	기존 내용	개정 사항 제안
장애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자체는 정책결정과 실시과정에서 장애인 및 부모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항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장애인 관련 정책을 홍보해야 한다고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의 신설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필요 ○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 보호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등도 포함하여 가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 제30조의 1 신설 또는 제35조의 1 신설 - 제2절의 기본정책의 강구 및 제3절 복지조치 등의 조항에 장애인 가족지원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제시 필요

법령	기존 내용	개정 사항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 돌봄 부담 해소, 가족의 휴식 지원 등과 관련된 규정 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특수관련 서비스) 제1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 ○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23조 개정 필요 - 가족지원의 종류는 제시되어 있으나 가족지원에 대한 비용 부담 규정 제시 필요(현재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음) - 학교 등에서의 가족지원이 어려운 경우 외부 기관의 위탁 규정 제시. 위탁시 비용 지원 등의 규정 마련 필요 - 가족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제시 필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역할을 강요하는 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 ○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위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0조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적대적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필요 -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가족이 의사 결정을 대신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단서 규정 제시 필요 ○ 제36조 제2항 개정 필요 -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를 포함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책 제시 필요

❖ 유관부처 정책현황

-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 복지, 보호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정부 부처간 협조 및 상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법률 개정 에 관한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관련 법령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개정 준비를 위한 지원

정책제안 6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

❖ 제안배경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에 대한 지원과 한부모 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가족 및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기 때문임.

❖ 연구결과

법령	기존 내용	개정 사항 제안
건강가정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동조 ④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을 비롯하여 장애인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의 경우 특례 조항 포함 필요 - 장애를 가진 자녀 등을 포함하여 양육 부담이 심한 가정에 대한 휴식지원 등 추가 지원 규정 필요
한부모가족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정의)의 1 한부모의 정의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음. ○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의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는 이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의 경우 특례 조항 포함 필요 - 돌봄부담과 경제활동참여제한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 규정 필요

법령	기존 내용	개정 사항 제안
	<p>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간주</p> <p>○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와 같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함.</p>	
다문화 가족 지원법	○ 다문화가족의 자녀나 그 부모 등이 장애를 가진 경우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음.	○ 장애를 가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규정 제시 필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부양가족 지원제도와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양 대상에 노인과 아동에 국한해서 명시되어 있어 돌봄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은 제외되어 있음.	○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도 가족친화 환경 조성의 집중 지원 대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항 수정 필요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법령을 시급히 개정하여 근거법을 마련하여야 함.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실의 업무 개선에 대한 담당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가장 어렵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생각됨. 즉,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실의 업무 확대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에 대한 두려움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정부 해당 부처 간 정책의 필요성 공감대 확보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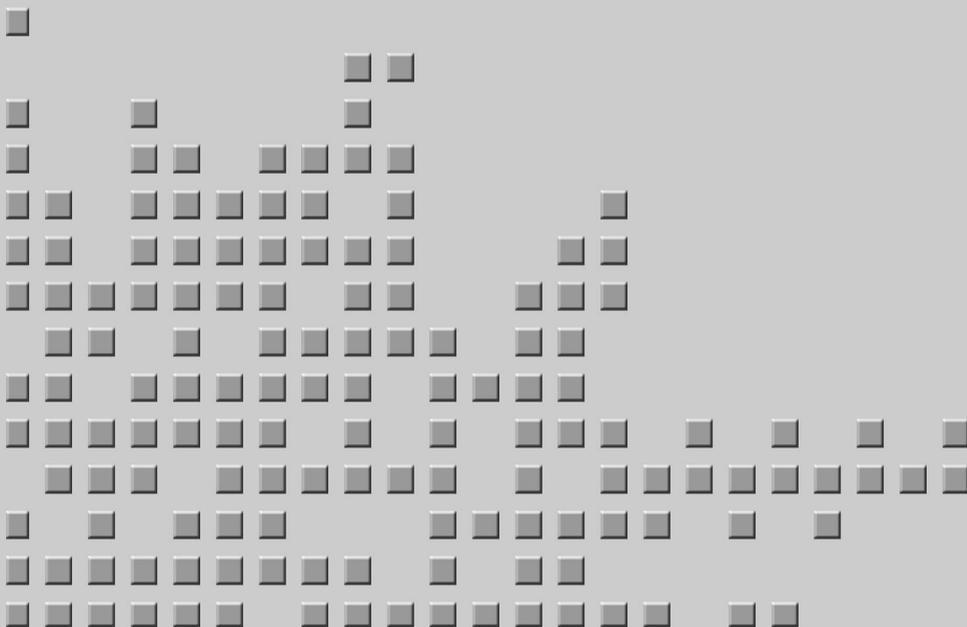
의식, 활동, 문화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 • 임지연 | 47

세대간 의식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Ⅲ:

가족과 가정생활에 관한 의식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 이종원 | 56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 | 6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75-5(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0-R04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청소년시설 평가모형과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연구라기보다는 적합한 평가모형 사용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평가모형 연구에 있으며,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이론적 개념모형을 구안하여, 타당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음. 이 연구는 3년차 연구로서 1년차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원에 적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였음. 이를 통하여 평가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이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설 운영지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청소년활동시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3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인 2010년 연구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평가모형 개발연구로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청소년수련원에 적합한 평가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 ▶ 청소년수련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하여 적합한 평가모형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였음. 이를 위해서 개념적 평가모형 구안에 필요한 평가대상의 이해, 평가논리, 평가준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이론적 정책적 논리를 고찰하였음.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의 개념과 평가현황

분석, 평가모형과 통합적 평가접근방법의 타당성, 평가이해관련자(stakeholders)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봄.

2. 국내외 청소년시설 평가 사례조사

- ▶ 평가의 동향과 국내외 청소년시설 평가사례를 살펴보고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평가모형 개발에 반영함.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다양한 영역(경영 및 조직운영, 지도자, 프로그램, 청소년,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위생 등)은 복잡한 요인 간의 관계로 이루어져있음. 이러한 다양한 요인 간의 관계는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실험과 같은 인위적 상황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각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사례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음. 이러한 요인은 차후 평가모형 및 평가내용에서 활용됨.

3. 청소년수련원에 적합한 개념적 평가모형 구안 및 타당화

- ▶ 평가가능성 사정(평가대상 파악 및 평가활동 설계), 평가논리, 평가모형, 평가준거, 평가도구, 평가 자료수집 및 결과활용 등에 대한 개념적 평가모형을 구안하였음. 또한 구안된 평가모형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조사를 통한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음.
- ▶ 이 연구에서 평가모형은 평가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이해, 평가내용(평가준거 및 지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활동, 평가활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체계화한 내용을 의미함.

4. 개발된 평가모형의 현장방문 시범적용 및 결과분석

- ▶ 개발된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은 현장 평가활동을 통한 평가내용과 평가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결과를 반영하여 경험적으로 타당화 된 최종 평가모형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수정·보완을 거쳐서 개발된 평가 모형 및 지표를 통하여 시범적용을 실시하였음.
- ▶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 평가시스템을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단계 논리모형, 2단계 평가기획, 3단계 평가지표·편람 개발, 4단계 사전워크숍, 5단계 자체평가, 6단계 프로그램 참관과 서면평가, 현장방문 프로그램 참관(질적 평가자료 수집), 현장방문 서면평가(양적 평가자료 수집), 인터뷰 및 피드백, 평가결과를 통한 피드백 보고서 제출, 7단계 수집된 평가자료 분석, 8단계 종합평가회의, 9단계 평가결과보고, 10단계 평가활용임.
- ▶ 시범적용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개발된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핵심내용 체계”를 위와 같이 10단계 모형으로 제시하였음. 또한 평가 목적과 상황에 적합하도록 주요단계를 중심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

정책제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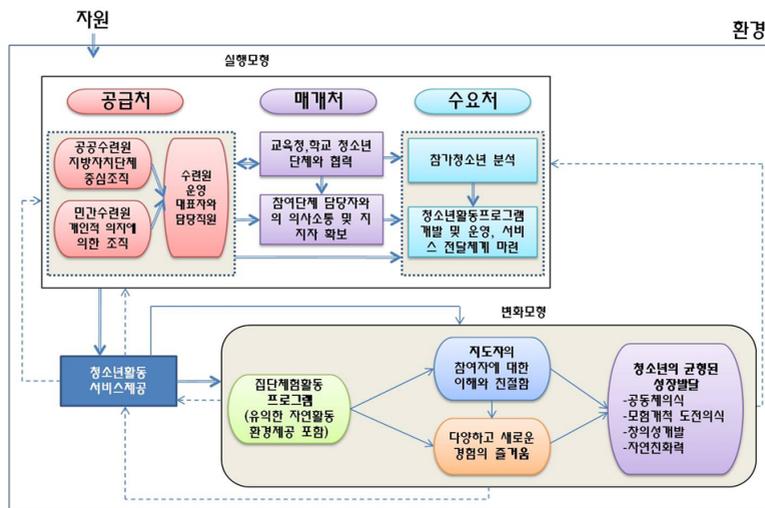
청소년수련원에 적합한 논리중심의 평가모형 개발

❖ 제안배경

- 청소년수련원의 작동논리모형은 청소년수련원의 전반적 이해를 돕는 모형으로서 평가 모형 및 지표와 관련한 핵심요소와 키워드를 설명하는 것임. 이러한 논리모형 구안을 통하여 평가모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활용하였음. 구체적으로 논리모형에 나온 요소들과 용어는 각 평가 영역과 지표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되었음. 청소년수련원 작동 논리모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한 평가준거(평가내용)의 개발과 논리모형의 체계를 활용한 평가준거의 구성이 필요함. 즉, 청소년수련원과의 관련요인들과 실제 작동되는 실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평가 내용 및 지표를 개발하고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 청소년수련원의 작동논리모형 [그림 1]은 청소년수련원의 전반적 이해를 돕는 모형으로서 평가모형 및 지표와 관련한 핵심 요소와 키워드를 설명하는 그림임. 이러한 논리모형 구안을 통하여 평가모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활용하였음. 구체적으로 논리모형에 나온 요소들과 용어는 각 평가영역과 지표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되었음. 이러한 개념적 논리모형은 이론적 고찰과 전문가 집단의 FGI를 통해 도출되었음.



[그림 1] 청소년수련원의 작동논리모형에 대한 개념 틀

- 첫째, 실행모형(action model)은 청소년수련원이 어떤 요인들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둔 내용임. 즉 규범적 논리로서 청소년수련원의 기획, 운영, 진행과정에 초점을 둔 내용으로서 경영기획 및 조직운영, 지도자, 프로그램, 청소년,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위생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른 평가접근방법은 시설환경 평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질적/양적 평가지표에 활용하였음.
- 둘째, 변화모형(change model)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는 바에 중점을 둔 내용임. 즉, 인과론적 논리로서 프로그램의 의도한 결과, 영향, 효과에 초점을 두고 어떠한 논리로 효과가 발생하였고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둔 내용임.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집단 체험활동 프로그램 및 유익한 자연활동환경을 제공했을 때,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의도한 결과로서 공동체의식, 모험개척 도전의식, 창의성개발, 자연 친화력을 제시하였음. 이렇게 의도된 결과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의 즐거움, 지도자의 참여자에 대한 이해와 친절한 분위기와 같은 중재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질적/양적 평가지표에 활용하였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실이 매년 실시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평가모형에 대한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의 이해도 제고와 더불어 평가지표에 대한 상호 동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함.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평가모형과 평가지표에 대한 완벽한 조율 및 동의 확보

정책제안 2

평가위원 입장, 피평가자 입장에서의 관점 차이를 고려해야 함.

❖ **제안배경**

-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시설평가는 평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과 평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

고 보다 합리적이고 상호 긍정하는 관점에서 효과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입장에 처한 당사자들의 관점에 대한 이해가 서로 필요함.

❖ 연구결과

- 평가위원 입장, 피평가자 입장에서의 관점 차이를 고려한 평가내용의 설정이 필요함. 평가위원 입장에서 살펴보면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타당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평가모형과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청소년수련원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국가의 청소년정책이 실제 구현되는 청소년활동현장의 평가는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성과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피평가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현행 3년마다 이루어지는 행사위주의 평가보다는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평가준비 지원을 통해 수련시설의 성과개선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수련원 직원들은 대체로 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평가를 위한 자료의 준비와 평가 시 업무의 공백 등에 대해서는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현행 시설평가는 피평가자의 입장보다는 평가자의 입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고 있는 시설의 입장에서 다소 불만적 요소가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평가를 받는 청소년시설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예상됨.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정기적이고 꾸준한 설명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활동시설의 평가사업에 대한 정부 담당 부처의 확고한 입장 전달과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한 이해도 증진이 선행되어야 함.

정책제안 3

공공과 민간 청소년수련원 특성의 차이를 평가활동 시에 고려해야 함.

❖ 제안배경

-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은 설립목적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간 특성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

❖ 연구결과

- 공공과 민간수련원의 평가활동 시 차이점/특징 측면을 고려해야 함. 평가지표는 기본적인 공통지표와 특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시설의 특성과 평가 인식 및 준비 등 상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임. 공공청소년수련원과 민간청소년수련원의 기능과 역할에는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설립 목적과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공공청소년수련원은 공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여 설립되어 순수한 공익목적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민간 청소년수련원의 설립 주체는 개인으로서 개인사업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따라서 민간청소년수련원은 공익을 지향하지만 개인 수익에도 관심을 갖게 됨. 이러한 현실적 상황이 청소년수련원 구성원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평가활동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게 됨.

❖ 유관부처 정책현황

- 현행 청소년시설평가는 공공과 민간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국립시설이나 공공시설은 민간시설에 비해 인프라나 재정지원 면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서 있음. 따라서 운영에서 더 유리한 입장의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민간시설들의 오해와 피해의식이 강함.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정책제안 4

현장 평가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현장 서면평가 진행 시간표 등을 공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제안배경

- 현재 이루어지는 현장평가에서 평가를 받는 입장에 놓인 청소년시설에서는 평가라는 것 자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평가를 하는 주관 기관 입장과 평가를 받는 시설 간에 현장평가에 대한 상호 협조 혹은 공조를 이루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구결과

- 현장 평가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현장서면 평가진행 시간표, 현장평가 확인서, 자체평가 작성의견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관과 서면평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예산, 평가위원 수, 평가시간 등에 의해 평가진행 내용을 조절할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평가자·피평가자 모두 현장방문 평가 시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됨.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일부 평가에서는 현장평가를 가기 전에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자료확인 및 실태를 조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평가 진행 시간표 공유와 같은 문제점은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의 사전 조율을 통해 해소해 가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갑작스런 평가일정 변경이나 평가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현 시스템에서 일정과 관련된 문제점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상시적인 오픈 채널을 통해 시설평가 주관기관과 현장의 시설 사이에 진행관련 일정이나 시간표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을 적절히 추진하고 있음.

정책제안 5

질적 평가지표와 양적 평가지표를 병행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제안배경

- 현재 이루어지는 청소년시설 평가사업은 지나치게 계량화되어 있어 공공과 민간 시설 사이의 평가준비나 운영에 있어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시설 지원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

❖ 연구결과

- 질적 평가지표 활용에 있어 단순한 참여관찰로서는 양적평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관찰 뿐 아니라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가 필요함. 양적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낮은 지표에 대한 지표를 수정하고 중복된 지표나 의미가 모호한 지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질적 평가지표와 양적 평가지표를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현재 실시중인 시설평가는 양적평가에 더하여 질적평가 요소를 가미하고 있음. 그러나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완전히 분리 운영하여 별도의 평가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현 시설평가는 질적 평가 요소를 가미한 양적 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되며 운영 상 문제점은 보다 전문적인 평가자의 섭외와 충분한 평가사업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일 것임.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정부와 청소년활동시설 간 평가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보

정책제안 6

평가절차에서 평가이해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평가워크숍이 강화되어야 함.

❖ 제안배경

- 현행 평가사업에서 평가사업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평가자나 평가자 입장에서 각기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음. 따라서 워크숍이나 설명회, 혹은 교육활동을 통해 청소년시설 평가에 대해 이해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 시범적용을 위한 피평가자 설명회와 평가위원 워크숍은 평가위원과 피평가 기관 간의 평가에 대한 사전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하고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로서 평가의 성과를 위해 매우 필요한 절차임.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평가실시를 위해서는 평가이해관련자의 사전 워크숍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시간 사용계획 마련과 평가계획에 대한 세밀한 설명이 필요함.

❖ 유관부처 정책현황

- 현재에는 평가사업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실에서 평가사업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평가주관기관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평가사업을 수탁받는 평가 주관기관은 거의 매년 평가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평가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가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과 설명, 수정과 같은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평가지표에 대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 간의 이해 상충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지속적인 설명회와 교육, 워크숍 개최를 통한 완전에 가까운 평가지표 산출 및 사업 연도 초기에 각 청소년시설에 공지



세대 간 의식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Ⅲ : 가족과 가정생활에 관한 의식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76-2(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0-R05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가족의식·가정생활의 영역별 실태를 파악하여 가족관련 이론의 정립과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설문조사는 확률표집 방식으로 추출된 전국의 중·고교생(6,979명)과 그 학부모(4,010명) 표본을 대상으로 학급단위의 집단조사(중·고교생) 및 자녀를 통한 개별조사(학부모)의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 주요내용(조사결과)
 1. 가족의 개념과 범위
 - ▶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는 모두 “혈연공동체” “생활공동체” “애정공동체”에 높은 긍정응답률을 나타내었음. 애정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중시되고 있는 것은 세대를 불문하고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식의 한 단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한국사회의 가족관은 전통적인 부계-혈연 중심에서 모계-생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부모세대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백부·숙부보다는 이모와 외삼촌을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여기고 있으며, 애완동물을 자신의 가족으로 간주하는 청소년도 과반수에 달함.
 2. 가족의식·가치관
 - ▶ 청소년은 부모세대와 비교하여 보다 개방적·진보적인 가족의식을 보유하고 있음. 조사대상이 된 가족의식의 5가지 하위영역(가부장의식, 성역할관, 효의식, 부모부

양의식, 제도적 가족관) 중 부모부양의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모세대가 자녀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가부장의식과 성역할관에 있어서 부모-자녀세대간 차이는 매우 현저하였음.

- ▶ 청소년들의 가족의식은 배경변인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음.
- ▶ 가족의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남자 청소년에 대한 부친과 모친의 영향력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지만,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는 모친의 영향력이 부친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3. 가족기능 · 가족관계

- ▶ 가족의 건강성(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에 대한 평가는 부모세대가 더 높았지만,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부모-자녀세대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는 모친이 부친보다 높은 한편,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는 부친이 다소 높은 편으로서, 청소년들은 가정내에서 부친보다는 모친과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청소년들은 모친의 양육태도가 부친보다 민주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권위적 양육태도 측면에서는 부친/모친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이미지가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청소년들이 평가한 부모와의 세대 간 결속감은 모친이 더 높은 수준으로서 부친보다는 모친에 대해서 보다 강한 정서적·심리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가족활동 · 가사활동

- ▶ 청소년들이 가정내 일상활동(TV시청, 아침·저녁식사 등)을 함께 하는 빈도는 모친이 부친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배경변인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또한 계층위계가 높을수록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활동의 빈도가 높았음.
- ▶ 청소년들의 가사활동 참여는 일정 수준의 성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즉, 식사준비/설거지/세탁·빨래는 여자가, 집안청소/쓰레기 치우기는 남자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전체 가사활동 참여도를 성별로 비교하면, 부모세대는 여성의 참여도가 남성보다 월등하게 높은 반면, 청소년들은 남녀가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음.
- ▶ 남자 청소년의 가사활동 참여는 부친과는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모친이 가사활동을 많이 담당할수록 오히려 참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5. 가족관련 심리·행동 특성

- ▶ 가정의 계층적 지위는 청소년의 심리·행동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계층위계상 하층에 속할수록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편, 일상적인 비행 빈도는 높은 수준이었음.
- ▶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결손가정 청소년이 양친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이었고,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높은 권위주의 성향을 나타내었음.
- ▶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또한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일수록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책제안 1

부모를 위한 자녀지도 편람의 개발·보급

❖ 제안배경

- 가족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과 자질, 가치관을 함양하는 일차적인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혈연으로 맺어진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은 지식이나 기능 습득 중심의 학교교육과는 달리 자녀의 인격, 정서, 사회성의 형성과 함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청소년기는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가정환경이나 분위기, 그리고 부모의 지도와 교육의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작용하게 됨. 따라서 가정은 학교교육의 제한점들을 보완하고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적절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교육과 관련해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컸었던 반면에 가정교육이나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였음. 이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지도 과정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녀지도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가치 “자녀지도 편람”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연구결과

- 기초연구 : 학부모 대상의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녀지도와

관련하여 겪게 되는 문제의 유형과 내용을 파악함. 또한, 청소년관련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성장기 자녀지도를 위하여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정리함.

- 편람 개발 : 기초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편람 개발. 성장기 자녀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문제유형별 자녀지도 방안, 자녀지도 사례집 등으로 내용 구성.
- 보급·확산 :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 CD, 인터넷 게시 등 다양한 형태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보급. 각급학교 및 청소년관련 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재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유관부처 정책현황

- 1994년 한국청소년연구원(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부모를 위한 자녀지도 교재를 개발한 바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바람직한 자녀지도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편람 발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 기본방향 및 내용에 기본계획 수립
-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함.

정책제안 2

“가정의 날” 운영의 내실화 및 확산

❖ 제안배경

- UN은 1989년 제44차 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매년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음.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가정의 날은 세대 간 대화의 단절과 의식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족 공동체와 가족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념일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의 날과 관련된 중앙부처 차원의 행사는 여성가족부 주관의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이 유일하며, 이에 따라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대다수가 그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가정의 날이 국가의 공식적인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인지도가 높은 다른 기념일(스승의 날)과 일자가 중복되는 점, 관련 행사나 프로그램의 미비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 가정의 날과 관련된 행사 및 프로그램은 오히려 민간기업 단위에서 활성화되고 있음. 예컨대, 매달 특정 요일을 가정의 날 또는 패밀리데이로 지정하여 퇴근시간을 앞당기고 가족식사권 등을 제공하는 업체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와 같은 민간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가정의 날 운영의 내실화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연구결과

- 가정의 날 기념일의 조정 : “스승의 날”과의 중복을 피하고, 가족 기념일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가정의 날을 “아버이날”(5.8)이나 “어린이날”(5.5)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상적인 정례행사화 : 정부부처·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매월 특정일을 자체적으로 “가정의 날” 또는 “패밀리 데이”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점차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시켜야 함. 이 경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이 각급 학교의 휴무일임을 고려하여 둘째 또는 넷째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함.
- 가족친화기업(기관) 지정 :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가정의 날 운영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직원의 가족활동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유연근무제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가족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창(민간기업)하거나 기관평가 시 가점을 부여(공공기관)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경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체적으로 행사·사업 추진
- 대부분 기념식 개최, 유공자 포상 등 1회성 행사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정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념일 조정과 관련한 중앙부처 및 관련단체·기관간의 합의 도출이 필요함.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가정의 날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가정의 날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참여의지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79-3, 자체 보고서 번호 : 10-R08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2009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분야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함.
 - 초·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계기로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청소년활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 ❖ 주요내용
 - 그간 청소년활동정책은 청소년활동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없이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활동개념의 범주를 크게 넘어서지 못한 채 사용되어 왔으며, 청소년활동 개념은 정책의 수요자나 교육정책과 소통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체험활동개념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음.
 - 체험활동에서는 체험과 더불어 ‘표현’이 중요하며, 체험활동은 체계적인 경험으로서의 체험활동, 인성교육으로서의 체험활동, 직업교육, 자기주도성, 협동성, 상황중심 또는 문제해결 중심의 지도, 융합적 사고 경험, 학습의 즐거움이나 정서적 안정감 등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오는 경험으로 이해됨. 또한 많은 뇌과학연구들은 신체활동의 경험이 인지적인 측면에서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측정가능한 그리고 긍정적인 분명한 변화를 준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음.
 -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요구조사결과, 교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을 위해 학교 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거나 유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4

가지 영역 중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반면, 청소년지도자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4가지 영역 중 동아리활동이 학교와 연계하기 좋은 활동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음. 학생들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모든 활동에서 참여수준이 낮으며, 초·중학생은 ‘스포츠수업활동’, 고등학생은 ‘경제 및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범사업운영 결과, 청소년들은 체험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동기부여, 사회성 내지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 또한 교사들에게도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 시범사업 기관들은 지역협회의 운영을 통하여 학교, 교육청, 기업, 지역사회 민간자원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였으며, 지역협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또한 지역마다 전문적인 코디네이터를 배치·운영하는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정책제안 1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 제안배경

- 「창의인성교육기본방안」이 발표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야할지에 대해서는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한국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한 일본의 「종합적인 학습시간」이 10여년의 경과를 거쳐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연구결과

- 외국의 청소년 체험활동 사례 중 일본의 「종합적인 학습시간」은 여러 가지로 유사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줌. 일본 케센누마시의 환경체험활동 프로그램이나 효고현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은 모두 10여년의 경과를 거치면서 안정화된 사례들로 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체험활동이 학교급별로 계통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는 등 체계화되어 있음.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출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점진적인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전략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월에 「창의인성교육기본방안」을 발표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추진계획은 담고 있지 못함.
- 여성가족부는 2010년에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장기적인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조직과 지역사회가 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
-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에서의 청소년 체험활동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처가 없이는 성공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예산확보계획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교육기부운동에 의해서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차원에서 중장기 예산확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함.

정책제안 2

체험활동의 계통성 확보 필요

❖ 제안배경

-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성화되어 초·중·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반드시 계통성이 확보되어야 함. 즉, 학교급별로 연령별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체험활동이 마련되어야 함. 계통성의 확보는 중장기적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 연구결과

- 외국의 청소년 체험활동 사례 중 일본의 「종합적인 학습시간」의 모범사례들을 보면, 모두 지역내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연령단계별로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일본 케센누마시의 환경체험활동 프로그램, 효고현, 요코하마시 등의 체험활동들은 모두 계통성이 확보되어 있음. 계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반감될 우려가 높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계통성을 고려한 해설서나 운영지침 또는 운영계획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청소년활동정책 안에서 계통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당장의 정책효과만을 지향할 경우에는 계통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은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창의적 체험활동이 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또는 지역교육청이 지역의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계통성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자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로부터의 사례집 발간 등의 기초정보 제공이 있어야 함. 10여년간의 경험축적으로 얻어진 일본 요코하마시 등의 자료들은 주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관련자료의 대대적인 번역작업이 필요함.

정책제안 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 코디네이터 배치 필요

❖ **제안배경**

- 「창의적 체험활동」이 초·중·고등학교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는 이러한 역할을 할 교사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배치는 매우 중요함.

❖ **연구결과**

- 일본에서 「종합적인 학습시간」은 지역 코디네이터가 배치된 경우에 더욱 활발히 전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시범사업 운영결과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의 배치가 학교와 지역사회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유관부처 정책현황**

- 2011년 여성가족부는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 코디네이터의 배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아직까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교육청 담당 장학팀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내의 모든 학교에 대해서 코디네이팅 서비스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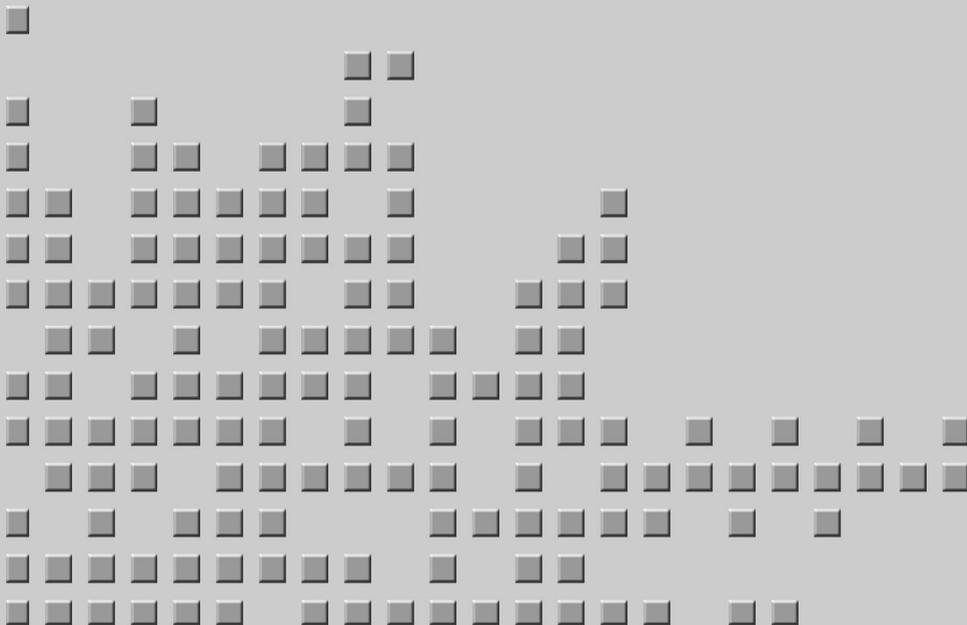
- 전국의 모든 지역에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지는 않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건강, 안전

위기 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이춘화 | 6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Ⅶ: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최인재 | 75





위기 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이춘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69-4(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0-R03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관리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자 함.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 실태와 긴급구호 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의 부적응 및 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기아동·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CYS-Net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지원센터와 Wee-Project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산하 위센터의 인력 상황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기 아동·청소년을 감당하기에 매우 부족한 현실임.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주로 학교밖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고, 위센터에서는 학교내의 초·중·고등학생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대상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음. 따라서 CYS-Net과 Wee-Project는 상담지원센터와 위센터의 적절한 연계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상호 공존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위기의 근원을 살펴보면 긴장이론에서 말하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과 부정적 자극의 존재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음. 긍정적 자극의 소멸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별거 등을 포함하는 데, 다수의 면접대상 청소년들이 이러한 긍정적 자극의 소멸로 인한 긴장을 가지고 있음. 부정적 자극은 학대, 방임, 폭행, 부모와의 갈등, 교사, 친구와의 갈등 등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말함. 긴장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만들어지며 분노와 우울, 두려

움 등의 감정은 내적으로 자살충동을 외적으로는 폭력과 가출, 절도 등의 비행과 범죄를 불러옴.

- 위기 아동·청소년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1388,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 대한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이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도움을 받은 것으로 꼽는 부분은 자신들의 얘기를 털어놓고 할 수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임. 그 외에 학업지원, 상담지원 등을 언급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한 청소년들도 있었고, 자고 먹을 곳이 있어서 비행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도움 받은 점으로 언급한 아동·청소년도 있었음.

정책제안 1

CYS-Net과 Wee-Project의 연계협력 강화

❖ 제안배경

- 위기 아동·청소년의 긴급구호를 위한 안전망으로써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Project)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중복지원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연구결과

- CYS-Net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지원센터와 Wee-Project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산하 위센터의 인력 상황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기 아동·청소년을 감당하기에 매우 부족한 현실임.
-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주로 학교밖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고, 위센터에서는 학교내의 초·중·고등학생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대상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음.
- CYS-Net과 Wee-Project는 상담지원센터와 위센터의 적절한 연계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상호 공존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유관부처 정책현황

- CYS-Net은 2005년부터 구축되었고,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150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위기 아동·청소년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Wee-Project는 2008년부터 구축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110개 위센터(Wee-Center)와 530개 위클래스(Wee-Class), 5개 위스쿨(Wee-School)이 위기 학생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교내에서 처리하거나 외부에 공개 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에 어려움이 있음.
- Wee센터에 배치된 상담사와 각급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사가 맡고 있는 학교 청소년 상담사례를 슈퍼비전(Supervision) 받으려면 학회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상급자와 함께 사례회의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많은 지역에 수련 감독 전문가 급의 상급자가 없으며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례회의를 통한 슈퍼비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CYS-Net을 운영하는 상담지원센터 등과 위센터가 공조할 수 있도록 협약 등을 체결하여 부적응,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정보 등을 공유하며 지원서비스에 대한 사례판정과 슈퍼비전을 공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사례회의와 보수교육의 협조를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지역의 전문상담 기관과 CYS-Net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슈퍼비전을 하면 사례도 공유하고 예산의 문제도 해소 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돕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정책제안 2

위기 아동·청소년 위기원인 개선을 위한 조기개입

❖ 제안배경

-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 중에서 그 개인에게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긴장상태가 개인에게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불러일으키고 약물사용, 비행, 폭력, 학교중퇴 등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이론화하고 있음. 따라서 위기 아동·청소년의 위기상황과 이로 인한 반사회적인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위기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긴장요인의 개선이 필요함.

❖ 연구결과

-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위기의 근원을 살펴보면 긴장이론에서 말하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과 부정적 자극의 존재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음. 긍정적 자극의 소멸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별거 등을 포함하는 데, 다수의 면접대상 청소년들이 이러한 긍정적 자극의 소멸로 인한 긴장을 가지고 있음. 부정적 자극은 학대, 방임, 폭행, 부모와의 갈등, 교사, 친구와의 갈등 등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말함. 부정적 자극 중에서 특히 대상청소년들에게 현저하게 많이 나타난 것이 아버지의 폭행과 아버지와의 갈등임.
- 긴장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만들어지며 분노와 우울, 두려움 등의 감정은 내적으로 자살충동을, 외적으로는 폭력과 가출, 절도 등의 비행과 범죄를 불러옴.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많이 보이고 있었으며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 - 예를 들면 가출, 폭력, 절도, 자살시도, 성매매, 성폭력 등 - 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해 왔고, 2000년부터는 아동학대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음.
- 전국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비롯하여 시·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19개소,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부모의 폭력과 알코올 남용문제는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을 야기하는 중요요인이고,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자녀들의 피해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며, 유기와 방임의 경험도 간과할 수 없음.
- 부모의 폭력, 부모와의 갈등, 경제적 곤란, 학교부적응 등의 긴장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감정 - 분노와 우울, 자포자기 - 을 초래함. 분노와 같은 심리적 긴장은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고, 우울과 같은 심리상태는 자살충동과 자살시도와 같은 행동을 일으킬 수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범죄피해와 방임 등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위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임. 위기 아동·청소년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시설 특성화에

-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위기 아동·청소년의 부정적 감정을 이성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함. 부정적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러한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따라 파괴적인 행동이 분출될 수도 있고, 승화를 통해 극복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도 부정적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정책제안 3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및 연계지원 강화

❖ 제안배경

- 위기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이용경로를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나 교사,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등에 의해, 아니면 자기 스스로 청소년보호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설 및 기관 간 연계에 의한 경우는 많지 않았음.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학교를 제외한 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간에 정보공유와 연계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함.

❖ 연구결과

- 조사대상 위기 아동·청소년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1388,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 대한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이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도움을 받은 것으로 꼽는 부분은 자신들의 얘기를 털어놓고 할 수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임.
- 그 외에 학업지원, 상담지원 등을 언급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한 청소년들도 있었고, 자고 먹을 곳이 있어서 비행을 안 해도 되었던 것을 도움 받은 점으로 언급한 아동·청소년도 있었음. 청소년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와 상담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되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위기 아동·청소년의 긴급구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있고, 이 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위

센터, 위스쿨, 위클래스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음.

- 이들 기관에서는 각각 위기 아동·청소년의 긴급구호를 담당하고 있고, 상호간 연계·협력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원활한 연계나 정보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자립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들은 장차 사회의 최하위계층으로 편입되고 범죄세대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함.
- 수용을 위주로 하는 청소년 보호시설은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이 청소년들의 심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청소년들 간에 편이 나뉘거나, 위계체계가 생기게 되면 집단 괴롭힘 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짐.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위기 아동·청소년들이 위기를 탈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가 필요함. 자립지원에는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 취업을 위한 지원, 당장 생계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가 학교나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접근,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 간 정보공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사시설 간 정보공유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임.
- 인간적인 신뢰의 획득은 위기 아동·청소년을 도와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따라서 보호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울분이나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도록 더욱 노력이 요구됨.
- 시설운영자나 봉사자들은 이러한 무리(clique)가 발생하여 갈등관계에 놓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임. 위기 아동·청소년이 갈등관계에 놓였을 때 그것을 헤쳐 나올 수 있도록 갈등의 조정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conflict management program)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82-3(93330), 978-89-7816-881-6(세트),
978-89-7816-883-0(93330), 978-89-7816-881-6(세트),
978-89-7816-884-7(93330), 978-89-7816-881-6(세트),
978-89-7816-885-4(93330), 978-89-7816-881-6(세트),
자체 보고서 번호 : 10-R10-10, 10-R10-10-1~3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가정, 학교 및 사회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해 청소년 건강과 안전(보호) 실태에 대한 파악을 통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음
 - 이에 2010년도 청소년 지표 조사에서는 청소년 건강과 안전(보호) 영역에서 요구되는 핵심지표 중심으로 세부 지표항목들을 개발함으로써 심층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 주요내용
 1. 청소년 지표(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설문문항 개발
 - ▶ 청소년 지표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소년 정책영역 중 관심영역을 건강 및 안전(보호)으로 설정하였고 이들 영역에서 요구되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세부영역을 설정하였음. 또한 각 세부영역에서 요구되는 중요 지표항목들을 개발하였음.

2.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전국 설문조사

- ▶ 개발된 청소년 지표 설문문항을 토대로 전국단위 대규모 표집조사를 실시하였음.
- ▶ 모집단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표집틀은 2009년도 교육통계연보이고, 표집방법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3. 조사결과에 대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제시

- ▶ 청소년 건강·안전(보호) 지표의 각 지표항목에 대해 응답자 특성(성별, 교급별, 거주지 및 가족구성)별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4. 조사결과 활용보고서 작성

- ▶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두 편의 지표 조사 활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정책적·학술적 활용도를 제고하였음.

정책제언 1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위한 특별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 제안배경

- 영양 및 식습관, 흡연이나 음주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가족구성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미비한 실정임.

❖ 연구결과

- 양부모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한부모가정 청소년이나 조손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아침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았고, 흡연이나 음주 경험도 양부모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 또한 구강건강이나 개인위생 측면에서도 양부모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건강행동 실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정부는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발생하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2000년 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아동급식은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급식지원 확대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취학아동에 대해 조·석식,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음.

- 2004년도부터 방학 중 토·공휴일 중식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급식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에서 결식을 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조손가정 청소년 및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지원 뿐 아니라 이들의 균형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 보다 심층적인 상담과 개입이 요구되나 현재의 전달체계와 인력구조 상의 상황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운 실정임.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1.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올바른 영양 및 식습관 형성을 위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 ▶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청소년은 식품군별로 과일이나 채소는 적게 먹고 탄산음료, 고기나 생선, 가공식품은 양부모가정 청소년보다 많이 섭취하여 식습관이 바람직하지 못한 반면, 체중감소 시도는 오히려 양부모가정 청소년보다 더 높았음.
 - ▶ 이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청소년에서 성장기 발육이 저해되고 생활습관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구조적으로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 ▶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상담 및 지원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중심이 되어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식생활 점검 및 교육을 면담 형태로 진행하여 부모의 개별적 관심과 지도 역할을 보충해야 할 것임.
 - ▶ 또한 조손가정 혹은 한부모가정 청소년에서 체중감소 시도가 높은 것은 가정적인 결핍으로 낮아진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 외모나 친구와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 따라서 자아정체성 및 자존감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단기 캠프나 수련회를 지역사회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은 비슷한 생활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통로가 되는 동시에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인식과 행동문제를 다루는 근본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임.

2.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 ▶ 음주와 흡연의 첫 경험 연령에서 조손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양부모가정 청소년보다 더 낮았음.
 - ▶ 이는 청소년기에 필요한 바람직한 건강행동 유도과 관리에 대한 가정의 역할이 양부모가정에 비해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이 취약함을 의미함.
 - ▶ 따라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하여 가정교육 및 지도의 취약함을 보충해 주어야 하며, 영양 및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전략과 같은 맥락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상담 및 집단 캠프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정책제안 2

권역별 차별화된 정신건강 증진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 제안배경

-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원동력으로서 건강한 청소년을 키우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특히 청소년이 적응과 관련된 탄력성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희망을 가진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적 요소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함.
-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CYS-Net 서비스는 도시의 규모별,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임.

❖ 연구결과

- 한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보면, 교급이 높아질수록 개인 내적영역 중 부적응적 측면인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 등의 정서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적응적 측면인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의 적응적 심리요인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음.
- 스트레스 영역에서도 교급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 학업문제나 진로문제 등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지원이나 가족관계의 질,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등을 포함하는 학교영역에서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때 교급이 높아질수록 심리건강 측면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음. 신체건강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심리건강에 대한 주관적 의식을 측정할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심리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나타났음.
- 심리건강 각 세부영역에서 성별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개인내 부적응적 측면인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 등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점수가 더 높았으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등의 적응적 측면에 대한 점수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낮게 나타났음.
- 학교영역에서는 학교수업, 친구관계, 학교생활 요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관계에서는 남학생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한 청소년지원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 말 97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2010년에는 148개 지역으로 그리고 2013년까지는 전국 16개 시·도는 물론 232개 시·군·구에 설치되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여기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14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허브(Hub)역할을 담당하며, 이곳에서 상담을 통해 의뢰된 요구 및 문제를 평가한 뒤 해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연계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
- 이곳에서 실시하는 지원내용으로는 상담 및 건강지원, 사회적 보호, 교육 및 학원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를 포함함.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연계망을 구축하는 체계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덜 하나, 광역시나 시·군·구에서는 지원체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제한된 전문기관이 부족하거나 전문가가 부족하여 연계망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정신건강 측면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서울보다는 광역시와 시·군·

구의 지역에 있어서는 국가의 시스템을 보다 세밀하게 구축하여 서비스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을, 그리고 서울에서는 부모들이 보다 정서적으로 자녀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과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제안 3

안전실태를 반영한 실제적 효과가 있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 제안배경

-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는 성인에 비해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그 피해가 심각하여 교육을 통한 예방이 절실히 요구됨.
- 아동·청소년들의 사고발생을 감소시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함.

❖ 연구결과

-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사고유형은 ‘부딪힘/넘어짐/베임사고’, ‘먹거리사고’, ‘교통사고’ 순이며, 대부분 사고가 가정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였고, 안전행동 습관의 조사결과 ‘운동 전 준비운동 정도’와 ‘복도와 계단에서 뛰지 않는 정도’의 실천률이 매우 낮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요구됨.
-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화재안전’, ‘여행안전’, ‘교통안전’의 순으로 안전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사고율이 높았던 ‘부딪힘/넘어짐/베임사고’와 ‘먹거리사고’, ‘자전거사고’ 관련 안전교육 수혜율이 낮아 아동·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안전사고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화재사고 관련 안전교육이 학교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비상문 위치 확인 정도’, ‘소화기 위치 확인 정도’를 거의 실천하지 않고 있어 실제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교육의 효과가 낮음.
-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이 안전사고의 경험률이 높고 안전행동 습관에서도 낮은 점수를 나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정책과 안전교육이 강조되어야 함.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이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통합교과로 운영되고 있음.

-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11년도부터 ‘교련’과목을 ‘안전과 건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등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임.
- 교육과학기술부와 식약청에서는 학교급식 개선 및 식품안전교육 실시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아용보호장구와 어린이 안전모를 제작·보급하는 등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정책 및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생활안전체험시설을 통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과정 내 안전 관련 교과목의 시수를 증가시키면, 타 교과목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효과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시설, 인력공급 등의 부족으로 실제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학교교육과정 내 안전 관련 교과목의 수업시수를 확충해야 함.
-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의 확대·설치가 요구됨.
-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를 반영한 안전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정책제안 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위험행동 초기단계의 적극적인 대응정책과 다중적인 위험행동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 제안배경

- 취약계층 청소년의 위험행동 경험률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시기에 위험행동(폭력, 가출, 유해약물 등)은 다른 위험행동과 중첩되어 발생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예방교육이나 위험행동 초기 단계에 적극적인 대응(예; 가출의 경우 아웃리치 확충) 및 잠재위험 청소년 대상 보호 정책과 다중적인 예방정책(예; 등하교시간 학교주변 집중적인 모니터링 강화)이 필요함.

❖ 연구결과

-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이 될 확률이 높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위험행동에서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음.
- 가출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4.3% 정도이고 이 중 가출기간이 하루나 이틀인 경우가 62%이며, 가출하여 지낸 곳이 친구집인 비율도 54%나 되어 가출 이후 초기대응에 따라 이후 청소년의 위험환경과의 접촉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음.
- 음주와 흡연은 아동·청소년의 9.5%가 ‘한달에 1-2회’ 음주를 하였고, 2.9%는 ‘거의 매일’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폭력,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이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 폭력 가·피해의 장소는 학교안과 학교주변이 가장 많았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이 일부 한부모가족 자녀의 방과후생활지도를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장의 요구에 맞게 청소년동반자나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비행학생 등에게 맞춤형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wee 프로젝트)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학교 내 인적이 드문 위험지구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아동·청소년 위험행동의 초기단계 개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증가에 따른 예산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보호정책의 기획과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학교 안과 밖에서 유기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외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정책제안 5

집과 학교주변의 보호환경 조성,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 제안배경

- 아동·청소년을 위험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해환경의 차단과 친사회시설의 확충 등 보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동·청소년 스스로 보호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갖고, 청소년보호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함.

❖ 연구결과

- 집주변에 유해업소가 상당수 분포되어 있어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변의 유해업소를 없애려는 노력과 함께 건전한 놀이장소와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위험행동 경험률 중 유해매체이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청소년들 스스로 유해매체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음.
- ‘성폭력피해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모른다’는 비율(62.6%)이 높고, 청소년전화와 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곳에 대해 알지 못하는 비율(40.6%)이 높은 반면, 고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한다는 비율(26.7%)이 낮게 나타났음.
- 청소년들이 또래로부터 심한 욕설(12.8%)이나 폭행(5.4%)을 당하는 비율보다 교사로부터 심한 욕설(14.5%)이나 체벌(19.9%)을 당하는 비율이 높고, 부모로부터 심한 욕설(10.9%)이나 체벌(10.8%)을 당하는 비율도 유사하거나 높게 나타남.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 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신도시 계획 시 주거지 및 학교위생정화구역에 청소년유해업소를 제한하고, 특정용도제한구역을 설치하며, 위락시설을 집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정화구역 안에서는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아동·청소년 보호에 취약한 지역의 유해환경 차단과 친사회시설 확충의 행·재정적

어려움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예산확충의 어려움이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아동·청소년 보호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친사회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친사회시설에서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함.
- 간접적인 아동·청소년 유해요인을 지닌 업소(예; 당구장, 노래방, 짬질방 등)에 대한 관리 등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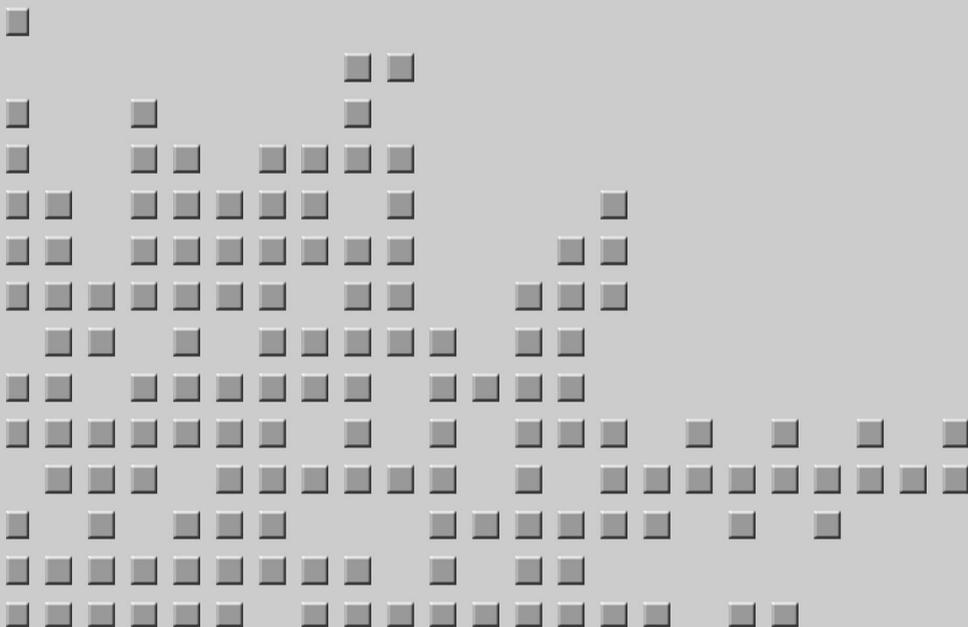
취약·위기 환경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성윤숙 | 87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단 연구 I·이혜연 | 10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지원 방안 연구 I:

청소년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김경준 | 1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77-9(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0-R06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을 정확히 인지·분석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사회·법제도 등 환경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선점 발견과 구현을 통해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한 건전한 성장동력으로 청소년들이 교육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 주요내용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의 개념 및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행태 및 문제점 심층 분석
 - ▶ 디지털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의 60%가 중학교 때 접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40%는 초등학교 이하 때 접해 유해매체의 접촉나이가 저 연령화 되어가고 있음. 초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그리고 가장 폐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유해매체물이 게임과 성인물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제한하는 등급제는 실효성이 없었음. 따라서 청소년들은 물신주의와 쾌락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사행성과 성인물, 심지어 성매매 등의 퇴폐문화를 어려서부터 답습하며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나 PC방 등 주변 환경을 통해 쉽게 유해매체를 접하게 됨.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청소년들 대부분은 피로도 시스템 같은 간접 섯다운제와 강제 차단시스템인 직접 섯다운제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처벌규정이 강화되어야 하고, 인증시스템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수용자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정책수립을 위한 델파이조사 결과, 비전은 “디지털 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주체적 이용문화 정착”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매체 이용 교육 강화’, ‘미디어교육의 정규교과 신설 및 조기 의무교육 실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실질적 처벌 강화’, ‘디지털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및 규제강화’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영역을 예방정책(교육, 홍보), 보호정책(이용자보호, 기술), 처벌정책(단속 및 감시, 공급자처벌)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를 정책의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제시하였음.
- 국내외 디지털 유해매체환경 관련 수용자 중심 정책 및 제도 분석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 및 정책로드맵 제시

정책제안 1

미디어교육의 정규교과 신설과 담당 교사 양성·배치

❖ 제안배경

- 디지털미디어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고 이들 디지털매체의 이용은 청소년들에게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각종 디지털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디지털미디어의 역기능, 디지털 유해매체물 등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윤리교육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 델파이조사에서 예방영역의 교육차원에서의 정책과제 중 ‘미디어교육의 정규교과 신설’(4.47)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중치에서도 ‘미디어교육의 정규교과 신설’(166)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없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미디어윤리교육 담당교사의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미디어교육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전문교사를 양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윤리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미디어관련 특강을 실시하거나 윤리교육의 한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전자는 일시적인 자극에 불과하며 후자는 심층적인 교육이 어렵기 때문임. 물론 별도의 미디어교육을 새로운 교과로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임.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학교책임자의 의지적 결단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임.

정책제안 2

창의적 체험활동 내의 미디어교육 연계

❖ 제안배경

-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이 전교생 단위의 방송을 통한 대단위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디어교육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미디어교육 교재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미디어와 미디어의 내용물에 관련한 열린 교육이 필요함.

❖ 연구결과

- 심층면접 조사 결과 학교에서 실시중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만족여부에 있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가 12명(40%), “관심없음”이 6명(20%), “만족함”이 1명(3%)이었으며 무응답은 11명(37%)이었음.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미디어교육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매체 및 프로그램 활용”이라는 응답은 7명(23%), “1:1교육을 통한 미디어 교육”은 5명(17%), “미디어 교육시간 증대”는 4명(13%), “적극적인 참여교육”은 2명(7%), 이 외에 기타의견 10명(33%), “없음” 1명(3%), “무응답” 1명(3%)으로 나타났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없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창의적 체험활동과 미디어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모델 및 전문적인 미디어교육 담당 교사의 부족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창의적 체험활동과 미디어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및 전문적인 미디어교육 담당 교사의 양성, 또한 수평적 열린 교육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1) 창의적 사고 교과목 신설 2) 독서토론 수업을 형식적으로 일반정규과정에 도입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과정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임. 중요한 것은 미디어교육과 다양한 현실적 주제에 대한 사유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일주일에 최소 3시간 이상은 할애되어야 함.

정책제안 3

유해매체물 차단 및 건전한 인터넷사용방법에 대한 학부모 홍보 강화

❖ **제안배경**

-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사이트를 발굴·소개하고 정보제공자들의 우수 콘텐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한 ‘청소년권장사이트’와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 정보이용자가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그린-iNet 2.0)’, 디지털 매체의 양면성과 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이에 대한 부모교육지침서를 개발하여 학교나 지역단위 문화예술회관, 주민센터, 시민단체 등에서 학부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건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원 제도가 필요

❖ **연구결과**

- 국외 정책 사례분석 중 일본처럼 가정의 인터넷 사용규칙 만들기 등 가정활동 지원이 필요함. 즉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적절 이용에 관한 계몽강좌를 민관이

연계하여 실시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이용규칙 만들기, 인터넷 분쟁 및 범죄 방지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넷에 관한 교양 육성을 위한 보호자용 교재를 제공하여 가정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보호자의 관리(parental control) 지원이 필요함. 청소년의 접속이력 체크기능과 기능을 한정시킬 수 있는 휴대전화 등 보호자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파악하고 발달단계에 따라 인터넷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지시키고 계몽할 필요가 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현재 여성가족부의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은 전국단위 교육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 국고보조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초·중등학교,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각급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교육 강좌를 활용,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전자우편으로 발송되는 음란성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발한 무료 소프트웨어인 ‘스팸체커’와 이를 아우르는 인터넷상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중인 ‘그린-i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유해매체물 차단 및 건전한 인터넷사용방법에 대한 학부모 홍보동영상 등 자료 개발을 위한 예산 및 인력확보 및 학부모의 관심 부족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유해매체물 차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익광고 및 가정통신문, 아이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신종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신고방법, 인터넷 자녀지도 가이드라인 지침,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이들 매체들을 활용하여 공익광고 및 공공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 및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크게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 강화

정책제안 4

셋다운제와 피로도 시스템 도입

❖ 제안배경

- 게임의 경우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09년 통계로 밝힌 바에 따르면 전체 게임중독자 191만 3천 명 중 93만 8천 명이 청소년들이다. 그리고 2008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아동·청소년 매체환경의 유해요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게임중독에 따른 연간 사회비용은 연간 8000억 원~2조 2000억 원에 이르고 있음. 나아가 중독된 청소년들은 수업권과 수면권을 박탈당하고 사행심이나 성비행 또는 폭력 등 반사회성을 지니게 됨은 물론 미래의 행복추구권이나 자아실현가능성을 상실하게 돼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지게 됨. 정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공급자의 자율정화에 맡겨왔음. 하지만 최근 위에서 밝힌 것처럼 청소년들의 중독률이 심각한 문제에 이르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소위 셋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

❖ 연구결과

- 델파이조사 결과 보호영역의 이용자 보호차원에서의 정책과제 항목 중 가중치에서 ‘게임중독예방을 위한 셋다운제의 도입’(30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게임중독예방을 위한 피로도 시스템의 도입’(267), ‘청소년이용자 개인정보 보호강화’(220)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심층면접 결과 청소년들은 정부에서 디지털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확실한 성인인증절차, 유해매체 차단 및 제재, 강력한 처벌 및 단속, 피로도 시스템, 셋다운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을 꼽았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관련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정사항에 대한 정부내 최종합의안(10.12.6)을 발표하였음.

□ 청소년보호법 규정

- 16세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회원가입시 친권자 동의
 - ▶ 관련 필요사항은 게임법 규정에 따름, 처벌조항 없음
- 16세미만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0시~6시) 게임제공 금지
 -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6세미만 청소년의 게임이용정보를 친권자에 고지

- ▶ 관련 필요사항은 게임법 규정에 따름, 처벌조항 없음
- 인터넷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예방·상담·치료 등 지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게임과몰입 예방 부분)
 - 게임사업자는 게임중독·과몰입 예방조치(아래)를 문화부 장관에 보고
 - ▶ 게임이용자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 청소년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 ▶ 청소년 본인·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이용방법, 이용시간 제한
 - ▶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 이용정보 제공
 - ▶ 과도한 이용에 대한 주의문구 게시
 - ▶ 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내역 표시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섣다운제 도입에 대해 게임업체는 청소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즉 향유권을 침해하며 수출산업으로서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게임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청소년보호법 규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 개정이 필요함.

정책제안 5

디지털 매체물의 청소년미디어 보호담당관제 설립 및 강화

❖ 제안배경

- 디지털 매체환경은 그 범주가 인터넷 가상공간에까지 미쳐 정부가 모든 환경을 규제 한다는 것이 비용적으로, 기술적으로, 법제도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결국은 자율규제 쪽으로 유도하고 자율규제를 관리, 감독하는 ‘규제된 자율규제’ 즉, 공동규제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방송사와 포털의 자율규제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제도의 개정 및 명시가 필요함. 독일의 청소년 보호 담당관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에는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의무적으로 실시

하고 있지만 이를 방송 및 여타 매체분야에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 국외 사례 조사 결과 독일의 경우 이미 2003년부터 ‘규제된 자율규제(selbstregulierte Selbstregulierung)’ 사례로 FSF(die Freiwillige Selbstkontrolle Fernsehen: 자율 통제 TV)기관이 독일의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KJM)’로 인허를 얻어 운영되고 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없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디지털 유해매체물의 전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 간의 정보교류 및 주무부처와의 민관 핫라인을 통해 통합적인 유해매체물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정책공조 구조가 필요함.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독일의 청소년미디어 담당관제를 참고하여 청소년 디지털미디어환경의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함.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는 ‘청소년디지털미디어위원회(가칭)’를 설립하거나 현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고, 이 기구를 통해 방송사와 포털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방송사와 포털의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유해프로그램 차단노력을 권장하는 등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종합평가하는 방안 도입

정책제안 6

스마트폰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 제안배경

- 청소년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에서 불법유해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필터링은 청소년 범죄피해방지에 효과적임. 또한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청소년에 의한 이용방지도도 필터링은 효과적임. 이에 법률로 휴대전화 사업자에 의한 판매계약이나 기종을 변경할 때에 필터링 서비스의 고지 권장을 피하여 필터링 이용의 활

성화를 꺾을 필요가 있음.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
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규정
하고 있지 않음. 이에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 국외 사례분석 결과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
비 등에 관한 법률>에서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 계약 상대방이나 단말기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정보 필터링 서비스 이용을 조건부로 하여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7조). 휴대전화기를 제외한 인터넷 접속기기 제조사업자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나
또는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을 쉽게 하는 조치를 한 후에 기기를 판매하여야 한다(제19조).

❖ 유관부처 정책현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음란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로 접속
을 차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클린앱 보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
을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임.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해외에서 유입되는 성인사이트나 스마트폰 콘텐츠는 나라 밖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
문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이고, 해외 성인사이트 관련 70
만~80만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들을 일일이 차단하려면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서버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그린i-넷 SW를 청소년이 쓰는 스마트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
신사에 의무를 주면 해외업체들의 스마트폰 음란콘텐츠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힘이 될
수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및 무선전화를 통
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책제안 7

공인인증서, 친권자 연령 확인절차 등 실효적 공인인증제도 방안 마련

❖ 제안배경

-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 등 각종 사이트 가입 등에 있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의 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적 공인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보급·시행함으로써 청소년의 본인인증 강화 및 관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연구결과

- 심층면접 결과 온라인게임을 위해 타인의 명의 도용(부모님 및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에 조사된 총 30명의 청소년 중 22명(73%)이 “온라인게임을 위해 부모님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8명(27%)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없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공인인증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 모색 및 기술개발 부족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상대방 연령확인 절차에 대한 실효성 수단 강구가 필요함. 즉 포털 업체는 각 콘텐츠에 대한 연령구분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등급 제한 조치의 법률적용이 필요. 연령확인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친권자의 연령확인 절차, 공인인증서, 청소년증 발급번호 등의 연령확인 절차를 활용하고 인증 시 부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이메일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게임 등 콘텐츠 접속 시 연령과 이용연령을 확인하여 그 이용시간, 이용금액을 친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시간은 청소년 연령에 적절한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정책제안 8

웹하드 및 P2P 관련 사업자의 유해매체물 유통차단 프로그램 탑재 법적 의무화 및 사이트 규제강화

❖ 제안배경

- 사이버범죄의 근절을 위해 정부 및 수사기관의 단속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웹하드류의 불법콘텐츠 사이트 활성화도 하나의 원인임. 웹하드류의 사이트에는 수많은 각종 불법정보, 예컨대 사이버성인물, 불법복제 저작물, 사이버폭력물 등 불법정보가 범람하고 있음. 웹하드류의 사이트에 대하여 정부 및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 등 최대한의 적극적 규제조치가 요망됨.

❖ 연구결과

- 델파이조사 결과 보호영역의 기술차원의 정책과제 항목 중 ‘웹하드 및 P2P 사업자의 유해매체물 유통차단 프로그램 탑재 법적 의무화’ 평균이 5점 만점에 4.37로 나타났고 가중치에서도 ‘공인인증서, 친권자 연령확인 절차 등 실효적 성인인증방법 개발’(16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해매체물 블랙리스트 DB구축 및 활용’(150), ‘웹하드 및 P2P 사업자의 유해매체물 유통차단 프로그램 탑재 법적 의무화’(137)의 순으로 나타났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없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웹하드 및 P2P 관련 업계는 사이트 실시간 점검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의 기술과 실시간 점검 활동을 강화하거나, 보다 정교한 기술적 장치를 개발한다면 사람에게 의하지 않고서도 실시간 점검이 가능함.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불법복제 방지노력의 대응방식으로 수요적 측면에서는 첫째, 정품의 이용가격을 인하하는 전략, 둘째, 웹하드를 통한 불법 콘텐츠 사용의 용이성을 감소시키는 전략, 셋

째,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헤비 업로드 및 불법 방조 웹하드를 규제, 넷째, 홍보 캠페인과 학교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위법 인식 전달이 필요하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불법복제 콘텐츠의 공급량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며 웹하드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하는 방안과 웹하드 업체의 자체 모니터링 의무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정책제안 9

기업의 사이버윤리지수 평가 및 공개

❖ 제안배경

- 기업의 사회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포털사업체도 그 예외일 수는 없으며 특히 자사 인터넷망에 올려진 각종 콘텐츠의 불법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보다 사회윤리적인 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임.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이른바 ‘사이버윤리척도’를 개발하여 포털 등 각 인터넷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그 준수를 의무화하거나 또는 준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비준수자에게는 각종 불이익조치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연구결과

- 델파이 조사결과 처벌영역의 감시 및 단속 차원에서의 정책과제 중 ‘기업의 사이버윤리지수 평가 및 공개’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60으로 나타났고, 가중치는 ‘기업의 사이버윤리지수 평가 및 공개’(169), ‘상시적 시민자율감시 시스템 구축’(164), ‘디지털 유해매체물 관리 감시센터 운영’(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사이버윤리지수는 2006년 6월 개발된 구성방법을 근간으로 2008년부터 평가사업에는 참여사업자의 규모를 늘림으로써 사이버윤리지수의 수용기반을 확대하였으며 전문가 및 이용자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인터넷 업계 전반과 개별 사이트의 윤리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주요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P2P사이트, UCC사이트 등의 참여부족 및 사이버윤리 지수를 평가하고 공개해 비준수자에게 각종 불이익조치를 부과할 경우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사이버윤리지수 평가의 실시는 국가기관, 사업자, 시민사회단체가 사이버상에서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사이버윤리지수를 이용한 사업자 윤리수준의 측정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유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P2P사이트, UCC사이트 등 광범위한 참여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써 매체환경의 개선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임.

정책제안 10

인터넷, IT 관련 중앙부서 신설 및 인터넷 위법·유해정보에 관한 「IT 안심회의」 설치

❖ 제안배경

- 오늘날 시대는 인터넷, IT 및 융합 시대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내용을 총괄하기 위한 중앙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작은 정부를 외치며 정보통신부를 폐지한 바 있음. 그러나 작은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는 항상 그렇듯이 오히려 다른 여러 분야에서 방만한 모습을 보이기 쉽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IT 관련 업무의 중요성과 방대함을 인식한 주무부서 총괄책임자가 정보통신부와 심의부서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한 것이 잘 한 일이 아니었음을 매스컴에 발표한 사실이 우리에게 정보통신 관련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임. 이와 더불어 인터넷 위법·유해정보에 관한 「IT 안심회의」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 국외 사례분석 중 일본 정부에서는 국내외 인터넷 위법·유해정보에 관한 「IT 안심회의」를 설치하였음. 또한 정부와 관련사업자, 업계단체 등 관계분야를 망라한 원스톱

조직으로서 인터넷 위법·유해정보로 인한 문제에 대해 민관 실무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계에 있어서의 자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법·유해정보대책 관민실무가 원탁회의」를 설치하였음. IT 안심회의(인터넷 상의 위법·유해정보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는 2010년까지 인터넷 상의 위법·유해정보에 기인한 피해청소년 등을 대폭 줄일 것을 목표로 2007년 10월 15일 「인터넷 위법·유해정보에 관한 집중대책」을 수립하였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없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디지털 IT 관리를 위한 정부중앙부처의 신설에 대한 관심 및 공감대 부족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방대한 업무와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작은 부서로 기능이 축소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IT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디지털 IT 관리를 위한 정부중앙부처의 신설이 다시 필요.

정책제안 11

법 규정 위반 ISP(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강화

❖ **제안배경**

- 민사상 불법콘텐츠에 대하여는 포털 등 ISP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뛰어넘어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는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 절차에 가벌성이라는 형사적 요소를 가미하여 법적 책임을 가중하는 방식임. 아울러 자사 사이트내의 불법콘텐츠에 대한 주의의무, 삭제의무 등 의무기준을 명시하여 관련 의무 위반 시 형량을 증가하고 벌금을 증액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과태료를 증액하는 등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아울러 저작권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온라인서비스업체의 면책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 델파이 조사결과 처벌영역의 공급자처벌 차원에서의 정책과제 항목 중 ‘디지털 유해매체물 반복 유포 시 가중처벌제도 도입’(4.47)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 규정 위반 ISP(포털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강화’(4.43)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중치에서는 ‘법 규정 위반 ISP(포털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강화’(174)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없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포털 등 ISP의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나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기업과는 달리 국민의 정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터넷기업으로서의 고도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에 나선다면 오히려 긍정적 인식으로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임.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법제도 정비

정책제안 12

디지털매체 대중화에 부응하는 사이버상 청소년보호제도 도입

❖ 제안배경

- 스마트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킹(SNS)서비스, 3D, IP TV , 오픈마켓 게임물 등 새로운 디지털매체가 유통되고 있고 기존의 법률이 오프라인 매체 위주로 되어있어 새 디지털매체에 대한 유해매체물 관련 법제도 도입 및 대응책에 대해 시급하게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또는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 델파이조사 결과 처벌영역의 공급자처벌 차원에서의 정책과제 항목 중 ‘신 디지털매체

에 대한 유해매체 법제도 도입'이 5점 만점에 평균이 4.30으로 나타났고, 가중치에서는 '법 규정 위반 ISP(포털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강화'(17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유해매체물 반복 유포 시 가중처벌 제도 도입'(161), '포털사이트 운영제한 및 폐지'(143), '신 디지털매체에 대한 유해매체 법제도 도입'(126)의 순으로 나타났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스마트폰 등으로 촉발된 모바일 시대에 부합하는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임. 나아가 문화부는 오픈마켓 자율 심의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모바일 분야 차세대 게임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어려움, 기술발달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법제도 환경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새 디지털매체에 대한 유해매체물 관련 법제도 도입 및 관련 업계 및 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 연구 I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이해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94-6, 자체 보고서 번호 : 10-R14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취약가정과 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이들의 성장 발달, 생활변화 그리고 관련 정책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효과와 정책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2010년 연구의 단기적 목적은 2011년부터 최소 3년간 추진될 취약가정 및 시설의 아동·청소년 대상 종단조사를 위한 전체적인 기반 및 모형을 개발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내용과 조사설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임.
 - 장기적 관점의 목적은 그동안 거의 실시된 바가 없던 취약가정 및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 특성이나 생활 변화와 더불어 관련 정책이나 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등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다양한 유형의 취약가정과 시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취약가정 중에서 저소득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계층을, 아동복지시설 중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의 현황과 이용자, 서비스 특성 등을 분석하고, 조사대상 계층의 발달과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조사내용과 항목을 추출하고, 조사방향 등의 설정에 반영함.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

- 동·청소년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내용과 경향을 분석하여 중단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함.
- 다양한 아동·청소년 관련 중단조사와 복지관련 중단조사의 조사설계 방식, 표본추출 방식, 데이터의 수합 및 관리, 활용방법 등을 검토하여 향후 실시할 중단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조사의 방향설정에 반영함.
- 조사의 목적과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표본설계, 조사 체계와 방법, 조사영역과 항목, 조사 기간과 시점, 주기, 방법 등을 확정함.
- 예비조사 및 본 조사 설계의 주요내용

구 분	예비조사	본 조사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모집단 :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 및 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4학년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2010년 6월 - 방과후아카데미 2010년 10월 - 양육시설 2010년 1월 현재 이용 중인 초등4학년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200, 방과후아카데미 100, 양육시설 100표본을 임의할당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대도시의 시설별 초등4학년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배분 • 해당 지역에서 무작위로 시설 추출 후 차상위 이하 가구에 속하는 초등4학년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500, 방과후아카데미 250, 양육시설 250표본을 임의할당 • 시설별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4학년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법 결정 • 해당 지역에서 무작위로 시설을 추출한 뒤, 조사대상 초등4학년 추출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I (Paper and Pencil Inter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I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자료 수집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 • 심층면담 병행 고려(서비스 수혜 중지 사례)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6-7월

- 조사방법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패널과 조사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고 CAPI 방식을 이용한 조사경험을 지닌 업체 선정(2010년 7월부터 진행, 10월에 (주)동서리서치 선정)
- 조사대상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협력체계 구축



- 조사방법과 절차상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 조사지의 적합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11월 예비조사를 실시함.
- 2011년, 2012년, 2013년의 연도별 주요사업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계획을 마련함.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96-0(978-89-7816-895-3), 자체 보고서 번호 : 10-R15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대표적인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저소득 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소년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주요내용
 - 청소년멘토링활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현행 청소년봉사활동 및 멘토링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복지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욕구와 청소년, 코디네이터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며, 국내·외 사례의 분석과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멘토링활동 모델 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전국 1,200명의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복지적 지원 욕구와 청소년 멘토링 봉사활동에 대한 기대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멘토링활동에 효과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탐색하였음. 또한 전국 2,700명의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과 멘토링활동에 대한 참여욕구와 관련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멘토링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그리고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및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학교 자원봉사지도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청소년멘토링활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주요 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청소년 멘토링활동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 주

요 외국의 청소년 멘토링활동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멘토링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았음.

- 중·고·대학생이 각각 멘토가 되고 저소득가정 초등학생 아동이 멘티가 되는 6개의 청소년멘토링 모델을 시범·운영하였음. 이를 통해 멘토링활동이 청소년 멘토와 아동 멘티에 미치는 상호 효과를 분석하고, 시범사업의 확산방안과 청소년 멘토링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정책제안 1

청소년멘토링활동의 홍보자료 제작 및 교육과정 운영

❖ 제안배경

- 최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멘토링활동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임.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관심에 비해 참여 방법이나 멘토링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청소년멘토링활동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멘토링사례를 소개한 소책자 및 동영상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소년멘토링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센터나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 현재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참여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청소년봉사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청소년은 과반수를 넘지 않아서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없음. 많은 청소년들이 해외 봉사나 지도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원하고 있지만, 단순한 일손돕기 등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청소년멘토링활동은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비록 약 20% 정도의 청소년들이 멘토링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멘토링활동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멘토링활동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활성화되면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에 청소년들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짐.

❖ 유관부처 정책현황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생멘토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음. 2009년 10월말 현재 4,14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33,516명이고, 멘

티로 참여하는 학생은 46,138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 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멘티 학교 수는 2배 정도, 그리고 참여 아동 수도 3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9). 하지만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매뉴얼 제작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체계화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청소년멘토링 전문가의 부족으로 멘토링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전문 강사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이 멘토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중·고등학생이 멘토가 되는 청소년멘토링활동을 교육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급 학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특성에 적합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정책제안 2

청소년멘토링 전문가 양성과정의 운영

❖ **제안배경**

- 청소년 멘토링활동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음. 청소년 멘토링활동에서 청소년 멘토를 도와서 적절한 조언을 하는 일은 멘토링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로서 멘토링활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멘토링 전문가과정 등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멘토링활동 전문가 교육과정에는 멘토와 멘티에 대한 이해, 청소년 멘토링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효과적인 멘토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연구결과**

- 청소년멘토링활동에서 코디네이터 등의 전문가의 역할은 멘토링 운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멘토링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아서 멘토링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음. 실제로 멘토링활동시 청소년 멘토에 대한 수퍼비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멘토가 필요로하는 도움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멘토링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지 못함.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멘토링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청소년멘토링활동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인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청소년멘토링 전문가 양성과정의 운영과 동시에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정책제안 3

청소년멘토링활동 수행기관의 관리시스템 구축

❖ **제안배경**

- 청소년자원봉사포탈(DoVol.net)과 같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소년멘토링활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지원·관리와 온라인을 통해 멘토링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면, 멘토링활동의 시행에서 나타난 기관 및 지도자 관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자원봉사포탈을 통해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봉사활동이 단순한 활동시간기록이 아닌 자기기록방식의 포트폴리오형 봉사활동기록이 가능하므로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연구결과**

- 사례조사 및 시범사업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멘토링 운영기관은 인적

자원의 구성,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평가체계, 자원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관부처 정책현황**

- 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봉사활동은 16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각 지방센터는 중앙의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되어 청소년자원봉사포털(DoVol.net)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자원봉사의 시행을 위한 기관 및 지도자를 위한 봉사활동터전인증과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다양한 멘토링활동이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 청소년자원봉사포털(DoVol.net)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청소년멘토링활동의 관리에 대한 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인식 공유와 긴밀한 연계, 그리고 타 부처 관련 기관과의 연계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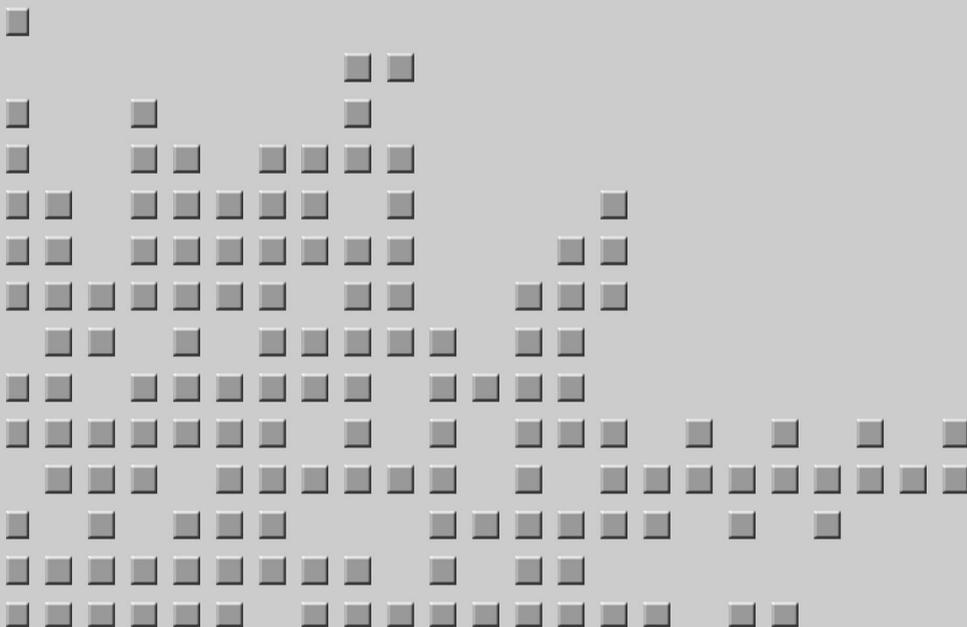
정책, 지역사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 | 113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 | 115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 | 12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Ⅲ • 김기현 | 12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기초연구)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68-7, 자체 보고서 번호 : 10-R01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현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역량 있는 차세대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 과정에서의 변화양상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종단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어야함.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성장과정을 종단의 축으로, 그리고 각 시기의 변화양상과 변화의 실태를 횡단의 축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종단조사모형과 내용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패널표본을 구축 함.
- ❖ 주요내용
 - 조사모형 및 내용설계를 위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발달의 영역을 신체발달, 지적 발달, 사회적·정서적 발달 영역으로 나누고 생태학적 맥락 이론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환경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헌 고찰.
 - 국내외 아동·청소년 관련 패널조사 비교 분석·아동·청소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내의 6개 패널(노동패널, 청년패널, 청소년패널, 교육고용패널, 교육종단연구, 한국 아동패널)과 미국, 영국, 호주 등의 6개 패널(PSID-CDS, NLSY97 Children, ADD health, ELS2002, ECLS-K, LSYPE)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 중인 패널조사의 차별성 도출.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조사 설계·3개의 코호트(초1, 초4, 중1)의 아동·청소년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각 코호트별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통해 추출된 전국단위의 표본 2,200쌍의 학생-보호자에 대해 7년간 추적 조사하는 단기종단패널 조사모형 설계.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1차 패널 구축·종단 조사 및 내용 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실사과정 및 표본구축의 전 과정의 내용을 기술.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72-4, 자체 보고서 번호 : 10-R02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내용적, 전달체계적,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 **주요내용**
 - 아동·주양육자 욕구조사결과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는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기회 제공(81.3%)이었으며 다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기회 제공(79%), 운동시설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77.8%), 다양한 운동기회 제공(77.7%), 여행을 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제공(76.3%),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 마련(75.8%),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72.7%),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70.6%) 등이었음. 분야별로는 체육분야(2.98점)의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광분야(2.94점), 문화분야(2.70점), 고용분야(2.68점), 주거분야(2.59점), 보건분야(2.58점), 교육분야(2.53점), 기타분야(2.44점), 복지분야(2.06점) 순이었음.
 - 주양육자는 자신과 초등학교 연령 자녀를 위해 아동심리상담서비스(52.9%)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50.1%),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경험 지원 서비스(49.8%), 아동건강검진 서비스(46.8%), 교육지원 서비스(교육 순회프로그램)(42.1%),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39.8%), 가족휴가제공 서비스(39.8%), 진로상담 서비스(39.5%), 맞벌이가정 방과후 돌봄 서비스(36.4%), 지역사회 체육공간 서비스(36.2%),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35.0%),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지원 서비스(30.9%), 가족관계증진 서비스(30.8%),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캠페인(30.7%),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30.5%), 아동 조기발달 검사(30.3%) 순이었음.

- 아동·가족관련기관이 현재 업무를 위해 연계, 협력하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들이 업무를 위해 가장 많이 연계, 협력하고 있는 기관은 지역아동센터(41.3%)와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40.5%)로 대상 기관의 40%이상이 연계, 협력하고 있었음.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살펴보면 연계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체계가 없는 경우가 27.9%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25.4%, 주민생활통합지원서비스(OK 주민서비스) 19.7%, 기타 14.8%, 위민넷 4.1%,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 2.5% 순이었음.
-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해 18.0%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찾아오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에 찾아오는 사람 중 시급하거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 1:1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9.5%를 차지하였음.

정책제안 1

서비스 내용적 측면 개선방안

❖ 제안배경

-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나 여행 등 가족 공동 활동의 적극적 확대
-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
- 통학 및 이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전거, 도보 교통관련 체계 개선
- 다양한 지역사회 체육시설, 공간 건립 희망
- 지역사회 중요 시설로서 아파트단지 재정비
-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의 전국적 시행
- 학부모 교육을 통한 아동, 아동지원서비스 관심 제고

❖ 연구결과

- 아동 욕구조사 결과 위 사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여성가족부의 경우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건설교통부의 경우 다양한 지역사회 개선 및 주택 보급 사업 등을 중심으로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예산 및 관련해당 중앙행정부처의 업무분담 문제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기존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내용 분석 및 조정
- 관련 중앙행정부처 업무연계 및 지역사회기관 업무연계 등

정책제안 2

전달체계적 측면 개선방안

❖ **제안배경**

- 유사 서비스의 단계적 통합 및 주무부처 선정
- 아동·가족 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의 확대
-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다각적 홍보방안 모색
- 전달체계상의 3가지 부족요소의 해소
- 놓여준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확대 방안 모색
- 지원 아동·가족 서비스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 누출 엄금
-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 현장실무자 협의체 구성

❖ **연구결과**

- 전문가 조사 결과 위 사항에 관해 비교적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현재 국가차원의 통합지원망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 주민정보서비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위민넷, 여성취업지원통합지원체계, CYS-Net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단일 통합지원체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우선권 및 업무배분관련 조정문제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기존 통합지원체계 세부내용 및 전달체계 분석
- 부처간 연계협력 및 업무분담 방안 검토

정책제안 3

법·제도·정책적 측면 개선방안

❖ 제안배경

- 기관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아동·가족 지원체계 평가기준의 장기화, 다원화
-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세부적 내용에 관한 국가차원의 배려
- 국가차원의 연간 아동·가족 지원서비스 매뉴얼 개발, 보급
- 아동·가족 지원서비스의 재조정
- 아동·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대상 단계적 확대 및 선택모듈의 다양화·선택성 확대

❖ 연구결과

-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관련 기존 선행연구 고찰 및 아동·주양육자·전문가 조사결과 위와 같은 내용이 강조되어 나타났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현재 기관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는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연계, 협력을 법제화 할 경우 일선 기관종사자의 업무부담 가중화 발생 가능
- 아동·가족 서비스별 주무부처 및 협력, 견제부처 설정시 우선권에 대한 이견 발생 가능

- 기존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아동·가족·기관 전문가의 일시적 혼란 예상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연계로 인한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인력충원,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사례관리 및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대상 확대에 의한 예산 확보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연구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78-3, 자체 보고서 번호 : 10-R07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실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 역량에 대한 인식과 수행수준, 복지 관련 요구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근무 청소년지도자들의 역량강화와 복지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둬.
- ❖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과 지도자, 전문직업성과 역량 및 직무만족 관련이론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대상 설문 조사·분석을 위한 관련변인 도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음.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근무환경 및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상근직 청소년지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근로실태 및 요구·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였음.
 - 외국(프랑스, 독일, 영국)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복지 지원 관련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들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대상 설문 및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하여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을 수련시설 종류별로 모색하였음.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첫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둘째, 표준임금체계 마련 및 공동적용을 통한 보수격차 해소가 필요함.
 - 셋째, 직무표준화 작업이 필요함.
 - 넷째, 청소년지도자 배치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 다섯째, 직무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내용의 다양화·전문화가 필요함.
 - 여섯째, 직업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일곱째, 개인역량 수행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여덟째,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로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및 교육시스템 구축·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대상 직무표준화 모델 개발, 청소년지도자 임금 표준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음.

정책제안 1

표준임금체계 마련 및 공동적용

❖ 제안배경

-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구나 수도권 인근의 수련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은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높은 이직률의 원인과 이로 인한 청소년활동지도의 질적 수준 저하의 원인으로도 연결되고 있음.

❖ 연구결과

- 청소년지도자의 월평균 급여는 175.0만원으로 나타남. 수련시설 종류별로는 청소년야영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문화의집이 가장 적은 것으로, 성별로는 남자지도자가, 설립주체별로는 공공시설이, 운영주체별로는 공공기관위탁시설이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지도자의 과반수정도(46.7%)는 표준임금체계 마련과 공동적용을 통한 임금 현실화 및 향상이 복지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임금체계 마련과 수련시설별 공동적용을 통한 임금 현실화와 보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 영국: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임금 수준 및 조건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자의 임금은 경력과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라서 다양함. 대학 수준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지도자는 연간 18,807파운드(한화로 약 3천 6백~7백만원), 경력이 있는 청소년지도자는 22,200파운드(한화로 4천 4백만원)에서 35,000파운드(7천만원)정도를 받으며, 매니저급 이상이 되는 청소년지도자의 경우는 일반 청소년지도자보다 급여가 더 높게 책정되는데 35,000파운드에서 60,000(한화 1억 2천만원)파운드에 이르고도 함.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추가 소요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시행이 늦춰질 수 있음.
- 수련시설 종류별, 지역별 특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보조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적용이 어렵거나 단계적인 시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청소년수련시설 근무 청소년지도자 보수체계 실태(수련시설종류별, 지역별, 자격별, 경력별 등)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추가 소요예산 대한 추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계적인 증액 노력도 요구됨.
- 표준임금체계 공동적용 의무화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청소년수련시설 내규로의 활용 유도가 필요함.

정책제안 2

청소년지도사 직무 표준화

❖ 제안배경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초과 근무의 주요 원인은 인력 부족에서도 기인하지만 직무가 명확하지 않아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데서도 기인함.
- 따라서 수련시설종류별, 직급별로 직무를 표준화한다면 직무중심의 인력관리를 통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청소년지도사 직무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청소년지도자의 직무기준이 청소년지도자의 직무 성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 양성과정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연구결과

- 청소년지도자의 평일 평균 근로시간은 9.78시간이지만 8.25시간 정도 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1.53시간 차이가 나고, 주말 평균 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은 7.71시간이지만 4.93시간 정도 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2.78시간 차이가 나며,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5.46일이지만, 4.98일 정도 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0.48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수련시설별로도 평일 평균 근로시간은 3.02시간, 주말 평균 근로시간은 2.53시간,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0.5일 차이가 나고, 운영주체별로도 민간기관 직영시설이 평일, 주말 근무시간과 주당 근무일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 준수와 아울러 직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사회복지사 표준직무 매뉴얼: 사회복지사의 표준직무는 사회복지분야 중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생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 6개 분야별 표준직무 및 등급별 업무 등을 구분하고 있음.
- 영국: 청소년지도자의 직무기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for Youth Work)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각 단계별 양성과정과 훈련과정, 실습과정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직무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및 사회적 기여도 구체화되고 청소년지도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명확해질 수 있음. 영국의 청소년지도자 직무기준은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구체화 및 전문성 함양의 지침으로서의 의미는 물론 전문 직종으로서의 직업역량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음.
- 미국: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 분야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 직무능력(Youth Development Worker Competencies)을 정하고 이와 상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직무기준에 의해 역할이 구체화되면 이에 따른 적정 인원 배치를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직무표준화의 기준 및 내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직무기준에 적합한 적정 인원 배치를 위하여 관련법에 '청소년수련시설 인력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다시 재조정·강화하여야 함.

정책제안 3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및 다양화·전문화

❖ 제안배경

-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청소년활동현장에서 변화하는 청소년관련 환경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기회 참여를 통해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함.
- 청소년활동지도자 뿐만 아니라 시설장이나 중간간부들을 위한 직무교육 차원의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과 슈퍼비전 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구결과

- 청소년지도자 직무교육이나 연수가 있을 경우 옳이상(67.6%)이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교육이나 연수에의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지도자 직무교육 참가 의사가 없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불참 이유를 살펴보면, 담당업무 대체요원 부족(32.1%), 참여시간 부족(22.5%), 업무수행에 도움이 별로 안되기 때문(22.2%), 경제적 비용부담(10.4%), 교육장소가 너무 멀어서(9.7%) 순으로 나타나 시설 차원의 이해와 지원도 필요하지만 수련시설종류별, 담당업무별 직무교육 내용 개선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장소 개발도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음.
- 청소년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역량 12영역에 대한 중요성 인식수준은 5점척도에서 관계형성 역량(3.29), 대인이해 역량/자기조절 역량(3.27), 고객지향성 역량(3.23), 조직혁신 역량(3.22)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행수준은 조직혁신 역량(2.98), 대인이해 역량/자기확신 역량(2.93), 관계형성 역량(2.92)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성역량(2.65)은 수행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와 관련된 지식의 습득 및 사용능력 수행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음.

- 개인역량 영역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수행수준 간 차이는 전문성 역량(0.50), 고객 지향성 역량/성취지향성 역량(0.45), 정보추구 역량(0.41) 순으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련시설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직무(연수)교육과정 개발시 수련시설 종류별로 차별화·전문화된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독일: 독일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첫째, 청소년지도자들에게는 청소년사업 이외에 학교와의 연계사업 업무들이 추가되었음. 둘째, 연령 폭이 큰 대상들이 섞여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셋째, 관련법들이 많이 바뀌었음. 넷째, 개개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원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음. 다섯째, 불확실하고 감축되는 재정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여섯째, 기관 경영차원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일곱째, 이주민 자녀와 가족들을 위한 개방된 사업들이 요구되고 있음. 여덟째, 교육 지원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부모 역할의 일들이 요청되고 있음. 이러한 독일의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청들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 교육이 모든 청소년 관련기관들에서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독일을 대표하는 공공 청소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청에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교육의 주제들을 분류하고 있음: ① 개별 청소년 영역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② 논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③ 기획, 관리, 조정 등의 행정영역에서의 역량강화 교육 ④ 중심 패러다임인 협력과 네트워크 및 참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임.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역량강화 교육 참여시간 확보를 위한 인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정책이 요구됨.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법령에 직무 보수교육 차원의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조항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예산 편성의 근거로 두어야 함(독일의 경우 자비로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보조해주어야 할 국가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음. 2002년 기준 독일 청소년청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연간 예산은 평균 € 19,300에 달하고 개별 근로자에게 연평균 € 280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약 3,000만 원 정도의 예

산이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에 투입되고 있고 근로자 1인당 연 약 43만 원 정도가 역량강화 교육비로 지원되고 있음).

-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연수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지도자 전문가검증제도 도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영국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Professional Validation이라는 전문가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청소년지도의 질적 향상과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Youth Support Worker와 Professional Worker들의 자격기준을 심사하고 Joint Negotiating Committee for Youth and Community Workers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연구개요

- ❖ 책임연구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ISBN 978-89-7816-903-5(93330)(세트)
자체 보고서 번호 : 10-R17, R17-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07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1, 2차년도 연구(김기현 외, 2008; 김기현 외, 2009)에 이은 마지막 후속 연구(3차년도)로서 청소년기 핵심역량에 대한 진단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동시에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학교 및 수련시설 기반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해 교실과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임.
- ❖ 주요내용
 - 이 연구는 협동연구과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조선대학교,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시범운영기관으로 참여하였음.
 - 2차 년도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국제비교가 가능한 PISA, ICCS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 핵심역량지수(Youth Key Competency Index) 개발 등 국제비교 분석을 수행함.
 - 청소년 핵심역량 중 하나로 고려한 사고력 영역에 대해서 청소년기 핵심역량진단 조사를 실시함. 조사대상 집단은 학습단계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전문계 포함)이며 2차 년도에 예비조사 문항이 개발되었던 비판적 사고력 영역 중심으로

- 지역별로 비례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선정함.
- 한국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 국제비교를 위해 IEA에서 주관하는 ICCS 2009에 참여하였으며 10월 26일에 ICCS 조사결과의 공개를 포함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조사결과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학술·정책·현장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함.
 - 핵심역량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시범운영을 실시함. 시범운영은 크게 2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학교기반 프로그램에서는 핵심역량중심 교과수업(지리과목)을 시범운영하고, 수련시설 기반 프로그램에서는 핵심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함.

정책제안 1

청소년 핵심역량 측정을 통한 청소년정책 성과지표 개발

❖ 제안배경

- 청소년 핵심역량 강화는 청소년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어 왔으나 그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못해 왔음.
- 이 연구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청소년 핵심역량 지수(Youth Competency Index)를 개발하여 제안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 추진한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에 성과지표로 제시된 바 있음.
- 이는 현재 수준에서 가용한 지표를 제한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청소년 핵심역량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 이 연구는 PISA, ALL, ICCS 2009 등 국제비교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비교 분석을 시도하였음. 먼저 예비적 고찰로서 청소년 핵심역량지수(Youth Key Competency Index)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해 보았음.
- 국제비교를 위한 핵심역량의 세 가지 영역은 OECD의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에서 제시한 영역으로 ① 지적도구 활용(Use tools interactively), ②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③ 자율적 행동(Act autonomously) 등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음. 이 연구에서 지표

구성을 통한 국가 간 순위산출방식은 Bonnet, et. al.(2003)의 고용의 질 지표(DWI: Decent Work Index)에서 사용한 방법을 적용하였음. 이는 해당 국가의 지표 점수와 해당 지표 내 최소점수간의 차이를 해당 지표 내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 간의 차이(범위)로 조정해 준 값(B-score)을 산출한 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국가 간의 순위를 산출하는 방식임.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지적도구 활용 수준은 핀란드에 이어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세부 지표 중 정보통신기술(ICT) 소양 수준은 비교대상 26개 국가 중 15위로 중간 이하의 결과를 보여주었음.

〈표 1〉 정보통신기술(ICT) 소양 수준 국제비교

(단위: B-score, 순위)

나라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캐나다	포르투갈	체코	스위스	대한민국
B-score	1.00	0.98	0.98	0.96	0.92	0.89	0.87	0.87	0.86	0.85	0.82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5

주 :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소양 점수는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 2006)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컴퓨터에 관련된 16개 질문에 '나는 매우 잘 할 수 있다'로 응답한 비율을 국가별 평균값으로 산출한 결과임.

-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은 22개 OECD 국가 중 22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음.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갈등 관리, 3위)은 높으나 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관계 지향성, 22위),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사회적 협력, 22위)에서는 최하위로 나타남.

〈표 2〉 사회적 협력 수준 국제비교

(단위: B-score, 순위)

나라	콜롬비아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벨기에	폴란드	칠레	룩셈부르크	대한민국
B-score	1.00	0.93	0.89	0.85	0.83	0.82	0.79	0.79	0.75	0.75	0.00
순위	1	2	3	4	5	6	7	7	9	9	22

주 : 사회적 협력 점수는 2009 ICCS 조사 문항 중 지역사회 자선단체 및 기부 단체 항목에 대한 참여 여부에 대한 국가별 평균값으로 산출한 결과임.

- 자율적 행동 수준은 22개 OECD 국가 중 7위로 나타나 중간 수준이었음. 18개 OECD 국가 중에서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고(거시적 맥락, 2위), 생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역량 수준(생애목표, 3위)은 높으나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수준(권리와 이익, 16위)은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줌

〈표 3〉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수준 국제비교

(단위: B-score, 순위)

나라	노르웨이	폴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멕시코	오스트리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대한민국
B-score	1.00	0.89	0.89	0.89	0.89	0.83	0.72	0.72	0.72	0.72	0.06
순위	1	2	2	2	2	6	7	7	7	7	16

주 : 권리와 이익 점수는 2009 ICCS 조사 문항 중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등 6개 항목에 최소한 한 항목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과 ‘장래 선거 참여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선거에 참여 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종합하여 국가별 평균값으로 산출한 결과임.

-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 핵심역량 지수(Youth Competency Index)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에 성과지표로 제시된 바 있음(여성가족부, 2010). 여기에서 활용된 성과지표는 이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 중 OECD 국가로 한정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율적 행동 등 두 부분에 대해서 각각 0.29점(비교대상 국가 중 19위), 0.36점(비교대상 국가 중 12위)을 현재의 성과지표 수준으로 제시하였음. 목표설정은 향후 5년간 OECD 평균(0.50) 도달을 위한 연간목표치를 현재치와 OECD 평균과의 격차의 1/5(0.04)로 설정한 후, 2년간 목표치를 현재치에 가산해 이루어졌음. 그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0.37점, 자율적 행동은 0.42점으로 제시되었음.

〈표 4〉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성과지표 중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성과지표	현황('06~'10)	목표치('12년)
①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0.29점('09)	0.37점
② 자율적 행동역량	0.36점('09)	0.42점
③ 진로직업역량	3.56점('09)	3.67점

출처: 여성가족부(2010),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2008-2012.

-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교육정책이 주로 지적능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왔다는 사실을 반영함. 보다 균형적인 청소년 발달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공적 신뢰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율성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음.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여성가족부는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에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을 4가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지표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지수를 활용하였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에 보다 정교한 성과지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의 개념과 세부 영역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지표로 설정될 경우 핵심역량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과 세부 영역에 대한 합의
- PISA, ICCS 등 국제 비교가 가능한 대표적인 조사에 핵심역량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문항 개발과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정책제안 2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 **제안배경**

-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범위와 영역을 구성하고 수련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왔으나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았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활동의 범위와 영역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의 활동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개발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참여자의 만족도 수준의 평가만 이루어져 왔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

증할 진단도구의 개발이나 검증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이제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활동 영역에서도 역량기반 학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학적인 진단도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 이 연구는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핵심역량 개발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토해 보았음. 학교 대상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목 수업시간을 역량중심으로 재편하여 운영하는 교과내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을 포함하며, 수련시설 대상 프로그램은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음.

〈표 5〉 청소년 핵심역량 프로그램 시범운영기관별 효과성 검증 결과

구분	시범운영기관 (시범사업기관)	내용	운영	효과성 검증 결과
학교기반 프로그램	조선대학교 (함평고등학교)	교과형 수업 (지리교과)	9~11월 (25차, 각 120분) 57명	지적도구 활용
				상호작용
		비교과형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9~11월 (25차, 각 120분) 30명	자율적 행동
				수업이해
수련시설 기반 프로그램	중앙대학교 (4개 수련시설)	비판적 사고력 프로그램	7~8월 (8회기, 각 90분) 34명	지적도구 활용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진실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명지대학교 (3개 수련시설)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	8~9월 (8회기) 33명	객관성
				체계성
		자율적 행동 프로그램	8~9월 (5회기) 32명	자기신뢰성
				비판적 사고기술
				적극적 경청
				문제인식
				거시적 맥락
				목표와 과제수립
				권익의 한계

주: 음영 처리한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부분임. 중앙대의 경우 비판적 사고기술 중 분석, 평가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줌. 명지대의 경우 목표와 과제 수립의 하위영역인 '수행'과 권익의 한계의 하위영역인 '욕구와 권리주장리'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줌.

- 이 연구의 선행연구인 2차년도 연구에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자체 연구예산으로 조선대학교에 의뢰해 핵심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한 함평고등학교 학생들과 국제성취포상제(Duke of Edinburgh's Award)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효과성 검증을 시도한 바 있음.
- <표 5>는 이번 연구에서 각 시범사업 운영기관별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성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효과성 검증은 청소년기 핵심역량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의 유사 실험 설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시범 운영기관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첫째, 학교 기반 프로그램이 수련시설 기반 프로그램보다 효과성 검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음. 둘째, 장기프로그램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었음.
- 이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제성취포상제 및 수련시설 인증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문항으로 활용될 예정임. 수련시설인증프로그램의 핵심역량 효과성 검증 문항은 다음과 같음.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은 하위요소 중 (1) 관계지향(Relate well to others), (2) 사회적 협력(Cooperate, work in teams), (3) 갈등관리(Manage and resolve conflicts) 별로 각각 1개 문항으로 개발함. 자율적 행동의 하위요소 중 (1) 거시적 맥락(Act within the big picture), (2) 생애목표와 과제(Form and conduct life plans and personal projects), (3) 권리와 이익의 한계(Defend and assert rights, interests, limits and needs) 별로 각각 1개 문항으로 개발함.

<표 6> 수련시설인증프로그램 핵심역량 관련 효과성 검증 문항(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1)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2) 나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3)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자율적 행동 영역					
(1) 나는 사회적 규범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행동하고 결정한다.					
(2) 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3) 나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 **유관부처 정책현황**

- 여성가족부는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으로 핵심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수련활동인 증프로그램 및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문항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활동프로그램이 개발되더라도 학교-수련시설, 대학간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음.
- 활동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을 경우 과학적인 효과성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학교-수련시설, 초·중등학교-대학교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교장, 교사, 교육감 등 교육계를 대상으로 활동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알리고 최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입학사정관제 등 교육개혁의 흐름과 연계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함.

정책제안 3

역량기반 학습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 도입

❖ **제안배경**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사실이나 지식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나 암기보다는 창의력과 같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지식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자질이나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생애를 통해 육성해야 할 역량 요인들을 규명하고 그러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지를 밝혀내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은 크게 바뀌고 있지 않음.
- 최근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논의에서 핵심역량은 중요한 개정방향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으며 현행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하

는 내용이 제안되고 있음(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나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개정방향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지 못함. 이와 함께 현재의 개정 방향은 교육과정의 통합적인 운영을 강조하는 접근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이제 전통적으로 다루어 온 교과보다는 역량이라는 것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조직하기 위한 기본 방향 혹은 관점이 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은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역량기반 학습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로 전환 중에 있음. 또한 유럽연합(EU)은 유럽교육 정보네트워크(Eurydice)를 통해 공교육 뿐 만 아니라 학교 밖의 활동 영역에서 여러 가지 핵심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Eurydice European Unit, 2002).

<표 7>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 중인 국가들

	범 교과 접근	교과 중심 접근	종합적 접근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 뉴질랜드 • 호주(빅토리아주) • 캐나다(퀘벡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르투갈 • 벨기에 (프랑스어권)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넣을지 논의 중인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북아일랜드) •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 (독일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 • 오스트리아 • 룩셈부르크

주: 범 교과 접근 - 특정 교과를 넘어 모든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경우

교과 중심 접근 - 개별 교과나 특별 과정들에서 역량 개발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적 접근 -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추진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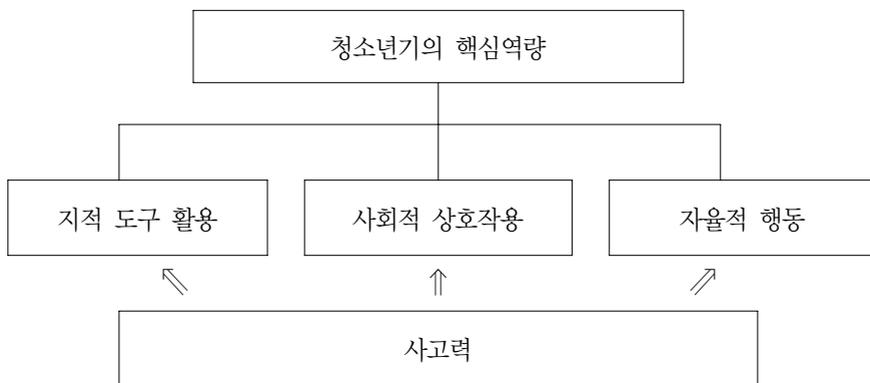
1) 일본은 역량을 생활력(生きる力)으로 개념화하고 교육과정에 포함시킴.

출처 : Eurydice European Unit(2002),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2007), Ministere de l'Education(2001), VCAA(2004), 文部科学省(2008).

- 뉴질랜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학교교육을 역량기반 학습체계로 전환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뉴질랜드의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량기반 학습을 실현하는 시범학교 사업에서 출발해 점차 이에

동참하는 학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 연구진이 뉴질랜드의 교육현장을 지켜보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연구·행정·실행 기관들에 깊이 뿌리내린 자율적인 태도였음. 뉴질랜드에서는 2010년에 핵심역량기반 교육 커리큘럼을 전면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서 뉴질랜드 교육부는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하달하지 않았으며 각 학교에서 각자의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임. 뉴질랜드 교육계가 핵심역량기반 교육제도를 준비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은 그 자체로 뉴질랜드 사회구성원들의 핵심역량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음. 뉴질랜드에서 역량기반 교육제도를 이루어낸 것보다 그것을 이루어낸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음. 즉, 교육현장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더불어 글로벌한 핵심역량 개념을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하게 변환하여 국가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음. 자국의 고유한 핵심역량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해외의 교육과정 개혁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 예컨대 뉴질랜드는 사고하기, 언어·상징·텍스트 사용하기, 자기관리, 대인관계, 참여와 공헌하기 등 5가지를 핵심역량으로 제시함. 호주 빅토리아 주는 3가지 핵심역량을 규명했으며, 그것은 자신을 개인으로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이해, 세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임.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핵심역량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들은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범주의 핵심역량을 산출하게 됨에 따라 학교교육 개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거국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단일화된 핵심역량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우리나라 청소년기 핵심역량 영역체계(안)

- 이 연구는 청소년기의 핵심역량을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으로 정규교육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에서도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영역체계를 [그림 1]과 같이 제안함. 청소년기 핵심역량 영역체계(안)는 기본적으로 OECD의 DeSeCo에서 제시한 영역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세 가지 역량 요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사고력을 추가하는 형태를 취하고자 함.

❖ **유관부처 정책현황**

-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형 교육과정 논의에서 핵심역량의 강화를 중요한 교육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2011년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하고 시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교과목에 대한 성적 이상으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개별 학교 중심이 아닌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장의 혼선과 성과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음.
-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추진될 경우 핵심역량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음.
- 핵심역량 기반 학습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사들의 참여와 헌신이 가장 요구되는데 교사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 추진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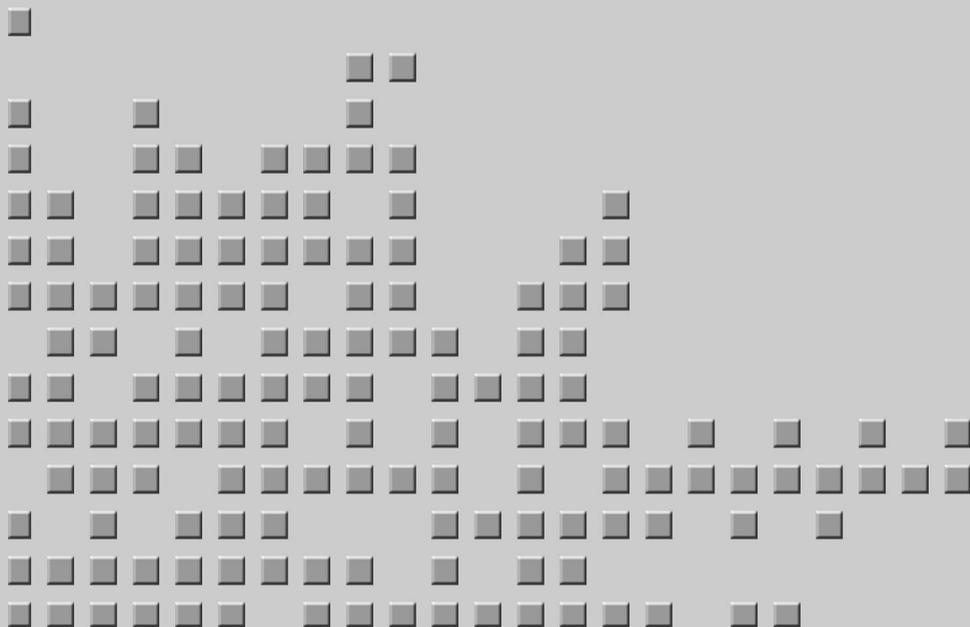
❖ **정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

-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역량 기반 학습체계에 대한 수요조사
- 역량기반 학습체계를 적용하는 시범학교 사업 추진
- 정부의 핵심역량 기반 학습체계 구축에 대한 장기계획 및 가이드라인 구축
-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 개선
- 입학 경쟁이 비교적 덜 한 초등학교부터 단계적 도입

부 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근 5년간 발간물 목록 | 14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직 명단 및 연락처 | 163





2010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흥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흥식
- 10-R03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Ⅲ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 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Ⅱ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Ⅱ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윤정·안소연·윤소윤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해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윤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박영균 · 이상훈 · 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 · 이승현 · 권수진 · 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 · 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 · 유영준 · 이명희 · 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 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 · 최수정 · 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 · 조아미 · 정경은 · 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4-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Hernan Cuervo · 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4-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 · 장지연 · 윤자영 · 성재민 · 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수시 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 · 길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 · 김성경 · 남미애 · 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 · 박제일 · 이은경 · 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 · 권해수

응역 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 · 김정환 · 조운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 · 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 · 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 · 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 · 김지경 · 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 · 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김지연 · 이춘화 · 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 · 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 · 류방란 · 김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 · 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윤숙 · 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 · 김지경 · 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 · 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 · 모상현 · 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 · 모상현 · 서정아 · 김호순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 · 모상현 · 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 · 이해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 · 이해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 · 이해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 · 김형주(2011년 발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 · 발달권 · 참여권 정량지표 -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I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II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지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Ⅳ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 「한국청소년연구」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 「한국청소년연구」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 「한국청소년연구」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
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중·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장근영·
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장근영·
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장근영·
임영식·정경은·조아미·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장근영·
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2009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 · 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 · 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 · 안선영 · 이계오 · 이미리 · 김성식 · 김명희 · 박일혁
- 09-R02 아동 · 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 · 김영애 · 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 · 김성연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 · 송병국 · 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 · 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 · 조손가정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 · 이용교 · 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 · 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Ⅱ / 이종원 · 김영인
- 09-R10 아동 · 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 · 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 · 설수영 · 원형중 · 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청소년 진로 · 직업 지표 / 최인재 · 김봉환 · 황매향 · 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아동 · 청소년 활동 · 문화 지표 / 임지연 · 김정주 · 김신영 · 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 · 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 · 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 · 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 · 천정웅 · 신승배 · 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 · 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Ⅰ / 양계민 · 조혜영 · 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Ⅰ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 · 윤철경 · 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Ⅰ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 · 문경숙 · 송민경
- 09-R16 아동 ·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 · 김진호 · 임성택 · 주동범
- 09-R16-1 아동 ·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 · 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 · 임영식 · 문호영 · 김남정 · 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김동일·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중·윤옥경·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오해섭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박은혜·이상훈·최은영·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조흥식·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정대영·황순영·김영미·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박현옥·이경숙·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김원경·고정욱·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이근매·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김나라·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회적 상호 작용 영역 / 김태준·김낭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김정희·설현수·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 · 정익중 · 박현선 · 천창암 · 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 · 김지경 · 성윤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 · 임희진 · 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 · 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 · 김성희 · 박영숙 · 이명균 (2010년 발간)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 · 임희진 · 안선영 · 김지연 · 강현철 · 김광혁 · 김기남 · 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 · 성윤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인식조사 / 장근영 · 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 · 박진규 · 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 · 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 · 안선영 · 장상수 · 김미란 · 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 · 박영균 · 성윤숙 · 문경숙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 · 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 · 김지경 · 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 · 이기봉 · 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 · 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 · 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이혜연 · 서정아 · 홍연균 · 유진이 · 김영호 · 김광남 · 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 · 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카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한국청소년연구」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2008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외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 외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 외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 외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 외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 외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 외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 외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 외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 외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 외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 외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 외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 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 외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외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 외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윤숙 외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 외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 외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 외

협동연구과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 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 외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 외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 외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 외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 외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 외

수시 과제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 외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 외

응역 과제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 외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 외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 외
200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 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 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 외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운숙
아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한강뜰새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 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 외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 외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외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 외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외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 외
2008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2008 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 외
2008 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 외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외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 외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운숙 외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3.28)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5.6)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5.2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7.8)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8.22)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9.2)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9.1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9.19)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9.26)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9.3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Ⅲ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9.26)

-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9.26)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10.24)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I」(10.28)
-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10.17)
-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10.17)
-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10.14)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10.17)
-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10.17)
-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10.16)
-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8)
-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11.24)
-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실태」(11.28)
-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12.22)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2007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 외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 외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 외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 외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 외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 외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 과제 / 백혜정 외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 외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 외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웅교 외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 외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 외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윤숙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 외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 외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 외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 외

협동연구과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 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 외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외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외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 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외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외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외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외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상 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외

수시 과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외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외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외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외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외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외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외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외

응역 과제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 외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 외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구 / 김신영 외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외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 외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 외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 외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 외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 조혜영 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연구 / 최인재 외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 외
청소년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 · 김은정 · 백원근 · 허병두
2007 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김은정 · 황진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 외
2007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 외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 외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 외
한국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 외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외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 외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 외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외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 외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1.23~24)
- 「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4.20)
-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5.12)
-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8.17~18)
-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6.28)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7.3)
-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7.5)
-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7.20)
-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7.20)
-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9.11)
-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9.13~14)
-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9.14)
-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9.14)
-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10.30)
-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11.1~2)
-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9)
-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11.27)
-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11.29)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12.7)
-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12.2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2006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 김기현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 외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중단 분석 / 김기현 외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중단 분석 / 김기현외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상욱 외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 김상욱 외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 외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 외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 최창욱 외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 외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 외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 외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 · 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 외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윤숙 외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외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해연 외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 장근영 외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윤철경 외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 외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 외

협동연구과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 외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 외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끼 외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은 외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 외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 외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이춘화 외
 가정 ·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 외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 외

수시 과제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현 · 이경상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 외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 외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 외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 외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ISSUE PAPER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평가 / 김성벽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운숙

응역 과제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 · 조혜영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운숙 외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외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 · 백혜정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 · 백혜정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 외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 외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외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 외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 외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 외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 외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 외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응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현 외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현 외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 외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외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철경 외
청소년행복 · 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 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 외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6.17)
-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타당도 검증」(6.21)
-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중간발표 워크숍」(6.23)
-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6.29)
-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7.7-8)
-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8.2~5)
-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8.14)
-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8.17)
-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8.18)
-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9.6-9.8)
-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8.22)
-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9.9)
-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최종발표 워크숍」(10.10)
-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최종발표 워크숍」(10.19)
- 「청소년과 미디어」(11.10)
- 「한국청소년행복지수」(11.15)
-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24)

연구수행 자료집

-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직 명단 및 연락처

(2011년 1월 현재)

부서	성명	직급(직위)	전화(사무실)	이메일 주소
기획조정 본부	김영한	선임연구위원(본부장)	2188-8845	mindhill@nypi.re.kr
	문경숙	부연구위원(팀장)	2188-8837	moonks@nypi.re.kr
	김지경	부연구위원	2188-8875	jdkim@nypi.re.kr
	오해섭	연구위원(팀장)	2188-8841	ohs@nypi.re.kr
	이창호	부연구위원(팀장)	2188-8801	ifsc334@nypi.re.kr
감사실	이종원	선임연구위원(실장)	2188-8812	yiwon@nypi.re.kr
청소년정 책연구실	조혜영	연구위원(실장)	2188-8813	jhy@nypi.re.kr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2188-8804	chyoon@nypi.re.kr
	맹영임	선임연구위원	2188-8814	yimaeng@nypi.re.kr
	최창욱	연구위원	2188-8807	ccwook@nypi.re.kr
	김현철	연구위원	2188-8836	heram@nypi.re.kr
	김형주	부연구위원	2188-8843	andrea@nypi.re.kr
	이기봉	부연구위원	2188-8878	sunlgb@nypi.re.kr
	안선영	부연구위원	2188-8806	sxa182@nypi.re.kr
	임지연	부연구위원	2188-8859	lly522@nypi.re.kr
	김희진	부연구위원	2188-8830	heui529@nypi.re.kr
아동정책 연구실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실장)	2188-8832	jun@nypi.re.kr
	박영균	선임연구위원(연구연가)	2188-8824	ykpark@nypi.re.kr
	황진구	선임연구위원	2188-8805	hwangjku@nypi.re.kr
	이춘화	선임연구위원	2188-8835	spring@nypi.re.kr
	이혜연	연구위원	2188-8834	hylee@nypi.re.kr
	김영지	연구위원	2188-8846	yjkim@nypi.re.kr
	성윤숙	연구위원	2188-8823	first1004@nypi.re.kr
	최인재	부연구위원	2188-8876	jae713@nypi.re.kr
	모상현	부연구위원	2188-8803	saarmo@nypi.re.kr
	서정아	부연구위원(연구연가)	2188-8828	jaseo@nypi.re.kr
	양계민	부연구위원	2188-8831	yangkm@nypi.re.kr
	김승경	부연구위원	2188-8893	skkim0822@nypi.re.kr
통계조사 연구실	임희진	부연구위원(실장)	2188-8886	hylim@nypi.re.kr
	김기현	연구위원	2188-8880	kihuns@nypi.re.kr
	이경상	연구위원	2188-8825	LKS1428@nypi.re.kr
	백혜정	부연구위원	2188-8818	hbaek@nypi.re.kr
	장근영	부연구위원	2188-8870	jjanga@nypi.re.kr
	김지연	부연구위원	2188-8868	okness@nypi.re.kr

2010년 고유과제 정책제안보고서

인 쇄 2011년 3월 31일

발 행 2011년 3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 문 사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